인권정보자료실
CPb1.96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본 의문사

홍석률(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전 보고서팀장)

이기훈(서울대 사학과 강사, 전 보고서팀)

2003. 7.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팀

인권정보자료실
CPb1.96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본 의문사

홍석률(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전 보고서팀장)

이기훈(서울대 사학과 강사, 전 보고서팀)

2003. 7.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팀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본 의문사

시작하는 글 / 1

I. 의문사 발생의 역사적 배경 / 2

1. 국가폭력 / 2
2.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 / 5
3. 무관심과 침묵 / 7

II. 의문사 발생의 역사적 추이 / 8

1. 박정희 정권기 민주화 운동과 의문사 / 9
2. 전두환 정권기 민주화 운동과 의문사 / 18
3. 노태우 정권기 민주화 운동과 의문사 / 27
4. 김영삼 정권기 의문사 (1993~1997) / 31

III. 역사적 맥락에서의 진상규명 / 32

1. 진상규명의 범위 / 32
2. 입증의 수준 - 어떠한 진실인가? / 34

맺음말 / 36

부록 **인권탄압, 민주화 운동 관련 연표 / 38**

시작하는 글

'疑問死'는 일반적으로 말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죽음을 의미한다. 생명권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 중에 하나이다. 의문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의 실체를 규명할 의무가 있다. 즉 의문의 여지가 있는 사체가 발견될 경우 자살이냐, 타살이냐, 아니면 사고사이냐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의문사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항운동과 독재정권의 폭력적 억압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이다. 이러한 의문사는 일반적인 의문사와 구별되어 '정치적 의문사'로 불리기도 한다.[1] 현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다루는 의문사도 일반적인 의문사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고 국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위법한 개입이 있는 의문사를 다룬다.[2] 이와 같은 정치적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단순히 이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아니면 사고사이냐는 死因에 대한 진상규명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고,[3]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라는 '국가폭력'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 맥락 자체가 한국현대사에서 발생한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정치적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사인과 살해자를 밝혀내는 단순한 사망 사건의 처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독재정권과 여기에 대항했던 저항운동의 충돌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그것을 규명하는 목적도 단순한 '의문의 여지가 있는 사망사건의 재조사'가 아닌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이라는 미래의 역사발전의 지향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4]

---

1) 박원순, 1999 [한국의 정치적 의문사]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자료집} 71-73쪽

2)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疑問死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3)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의 민주화 운동 개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주화 운동 개념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민주화 운동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본고는 의문사 사건의 발생과 그 진상규명을 한국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의문사를 발생시킨 역사적 배경을 총괄적으로 살펴본다. 그 다음에 각 시기별로, 권위주의 통치와 민주화 운동이 충돌하면서 의문사가 발생하는 추이를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맥락에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했을 때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한국현대사, 그 중에서도 본고가 다루고 있는 1970년대 이후의 역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실질적으로 미비하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인 방법론과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작성한 학술서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언론인, 민주화 운동 주체가 정리한 서사기적인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의 정확도와 풍부함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글도 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향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다 정확한 역사서술이 가능한 사실의 토대가 구축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작성된 기초조사 내지는 試論적인 글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I. 의문사 발생의 역사적 배경

1. 국가폭력

한국 정부는 일제 식민지 기간동안(1910-1945) 과대성장한(overdeveloped), 경찰, 군, 정보조직 등의 공안기구와 그 종사자들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았다. 분단정권의 수립(1948)과 한국전쟁(1950-1953)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일제 식민지 통치 말기였던 1943년 경찰의 총수는 22,728명이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51년 현재 경찰력은 남한만 63,42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5] 휴전과 동시에 다시 감소하기는 했지만 1958년의 경찰관 총수는 38,273명이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인구 540명당 1명의 경찰이 있는 셈이었다. 일제시대에 인구 1,027명당 1명의 경찰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분단 이후 한국정부가 얼마나 방대한 공안기구를 갖게 되었는지를 잘

4)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임대식, 1998 [친일, 친미경찰의 형성과 분단활동]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4쪽, 22쪽 참조.

보여주고 있다.[6]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서부터 형성된 공안기구의 반인권적 운영의 관행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정부수립 후에도 고문과 가혹행위는 이들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예사로 자행되었다. 박정희 정권기 최대의 권력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부장을 지냈던 김형욱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정의 직업 수사관의 전직은 사찰계 형사, 방첩부대 문관, 헌병하사관, 심지어 일제치하에서 설치던 조선인 헌병과 밀정 등 형형색색이었다. 그 중 어떤 사람은 일제 치하에서는 일본 순사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다가, 한때 공산당이 서울을 점령했던 시절에는 우익 민주인사를 때려잡다가 나중에는 공산당 간첩을 때려잡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도 있었다. 그들에게 소위 이데올로기란 하나의 겉치레에 불과했다. 그들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도 사람들을 때리고 고문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무정부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든지 증오할 수 있고, 어떤 고문술도 개발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학대함으로써 자신을 확인하는 새디스트들이었다."[7]

한국전쟁이라는 대폭발을 겪은 후 분단과 한국전쟁을 불러 일으켰던 극단적인 정치적 혼란은 차츰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대량학살은 1960년 4.19항쟁과 1980년 광주항쟁 과정에서 두 번 발생했다. 희생자의 숫자는 두 사건 모두 200여 명 남짓으로, 분단과 전쟁시기의 학살과 비교해 보면 그 빈도나 희생자의 숫자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폭력의 문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는 독재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대단히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다만 그 방법이 보다 제도화되고, 일상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경찰, 검찰, 정보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특히 저항세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독재정권 기간 중 집권당의 핵심 인물들도 최고권력자에 비위를 거스르면 고문의 사슬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다.[8] 또한 한국 최고

6) 오유석, 2001 [4월혁명과 피의 화요일] {20세기 한국의 야만} 일빛 383쪽

7) 김경재, 1991 {김형욱회고록-혁명의 우상} 2 235쪽.

8) 1971년 여당인 공화당의 간부들이 군사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여 내무장관 탄핵안에 찬성했다가 군정보기관으로부터 고문을 받은 일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신형식, 1985 [김성곤은 박정희를 시험했다] {월간조선} 3월호. ; 서병욱, 1987 [오치성이 말하는 10.2 항명] {월간조선} 6월호.

의 명문대학 법대교수였고 동생이 현직 중정 직원이었던 최종길도 중앙정보부로부터 고문을 받았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니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야당정치인, 민주화 운동가, 학생, 노동자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 것인지는 익히 예상할 수 있다.

독재정권의 공안기구들은 과대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인 측면도 뛰어났다. 현재 일제 관헌이 남긴 한국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보면 일제 당국이 밀정 등을 이용하여 얼마만큼 치밀하게 정보를 축적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군정기(1945-1948)에도 역시 미국인, 한국인 요원들은 보다 발전된 방식으로 방대한 정보기관을 운영했다. 현재 남아있는 미군정기의 방대한 서신 검열과 전화 도청 자료, 정당 사회 단체에 대한 치밀한 정보 분석, 미국무부 파일에 있는 한국인 중요 인사에 대한 약력 정리와 사회학자, 인류학자의 여론조사 분석 보고 등 그 치밀하고 방대한 정보 수집 및 운영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군정하의 한국인 종사자들은 이러한 정보 수집과 운영 기술을 습득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공안기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한편 1960년 4.19직후 미국 정부가 허정 과도정권이 격동기의 한국 상황을 수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안관련 전문가들을 내무부 등에 파견한 적도 있다.[9] 이렇듯 한국의 공안기구들은 정보기관 운영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과 운영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독재정권은 이렇게 강력하고, 잘 조직화되고, 잘 훈련되고, 경험 있는 공안기구를 민주화 운동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반면 민주화 운동세력은 분단과 전쟁이후 이미 병영화된 사회분위기와 압도적인 독재권력의 물리적 힘의 우위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다. 특히 분단상황 속에서 강요된 파시즘적인 반공이데올로기 공세와 반정부활동은 곧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으로 규정하여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하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은 무력할 수 밖에 없었다.

독재정권기 정치적 상황은 강력하고, 잘 조직화되고, 잘 훈련되고, 경험있는 독재권력과 미약하고, 비조직적이고, 훈련되지 못하고, 경험 없는 저항세력 사이의 계속되는 충돌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상황이었던 만큼 독재정권은 압도적인 물리력과

9) 당시 미국은 4.19 직후 불안한 한국 정치정세에 대체하기 위해 허정과도 정권기 내무부와 법무부에 각기 한 명씩 미국인 반전복(counter-insurgency) 활동 전문가를 파견하도록 주선하였다([Memorandom of Conversation Between Hu Chung -MacConaughy(1960.5.7)] RG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63 795B.00 Box 2180)

정보력을 바탕으로 대단히 은밀하고 기술적으로 저항세력을 탄압할 수 있었다. 또한 그 탄압의 양상도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테러를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 하나 각개 격파해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운동도 대부분 제도화되고 조직된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산발적이고 분산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이 강력한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당하여 계속 희생을 축적해오다가 특정국면에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희생의 축적과정에서 많은 개인들이 권력에 의해 각개 격파되어갔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한국적 특성을 보여주는 의문사는 이러한 맥락속에서 발생하였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딱히 목격자도 증거도 발견되기 어려운 의문에 휩싸인 죽음이 양산되었던 것이다. 남미의 실종(disappearance)과는 달리 의문사자의 죽음과 시체는 확인되었다. 그러나 죽음의 원인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인지, 자살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사인지 불명확한 죽음들이 이어졌다. 의문사는 국가 공안기구의 조직과 정보, 기술의 힘이 민주화 운동 세력의 힘과 엄청나게 현저한 괴리를 보였던 한국 정치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

독재권력이 남긴 가장 불행한 유산 중에 하나가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이다. 군사독재정권기 한국의 정치체제는 억압적인 국가기구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성격은 군사독재권력이었지만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존재했다.

공정한 선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선거가 실시되었고, 야당도 존재하였다. 일당독재 같은 것은 없었다. 또한 군인들에 의한 직접 통치는 오직 5.16 쿠데타 직후 3년 남짓한 동안만 존재했다. 그 후로는 민간 정부의 형식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중요 직책은 군복을 벗은 군장교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10] 또한

10) 박정희 정권기(1963-1979)에 고위직 행정관료 25. 5%가 군장교 출신 인사였다. 정부 고위 관료 4명 중의 1명은 군장교 출신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동안 일한 장관은 모두 120명이었는데 이중 42명(35%)이 군 장교출신 인사였다(양성철, 1994 {한국정부론} 박영사 214쪽, 286쪽

한국경제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개입속에서 발전한 만큼 경제도 이들 군출신 관료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전두환은 1979년 10월 박정희 암살 직후인 같은 해 12월 쿠데타를 일으켜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전두환이 기존 헌법 하에서 대통령으로 추대, 자신을 위한 헌법의 개정과 개정헌법에서 입각한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되어 형식적으로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1년 4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이는 전세계적인 쿠데타의 사례 중에 가장 정교한, 그래서 가장 길었던 권력장악 과정이라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권유지를 위해 멋대로 법이 유용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군사독재자들이 얼마만큼 절차적인 차원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세심한 신경을 썼는지를 보여준다. 절차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있었지만 내용적인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억압적 국가권력과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는 정치체제는 그 자체가 기만적인 것이었다. 국민은 여기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죽음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그 사인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규명해야될 의무가 있다. 비록 근대국가라 할 수는 없지만 조선왕조 때에도 주검이 발견되면 지방에 파견된 관리(수령)들이 나름대로 엄격한 절차와 규범에 따라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했다.[11] 그러나 군사독재권력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민주화 운동 또는 국가폭력과 관련된 정치적 의문사의 경우 국가권력은 죽음의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였다. 또한 의혹을 제기하는 유족들에게 입증의 책임을 떠넘겼다.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관리 또는 군관계자들이 "그러면 이것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증거를 가져와 보시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12] 국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정보부에 의한 야당지도자 김대중 납치사건(1973) 등에서 보이듯 국가기관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였다.

현재 의문사 위원회가 조사하는 모든 사건들이 국가폭력의 결과로 발생한 죽음이거나 국가가 그 진상을 은폐하였던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의문사 위원회가 조사를 종결한 사건 중에는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이나 은폐와는

11) 김호, 2001 [100년 전 살인사건, '검안'을 통해 본 사회사] {역사비평} 여름호 303-324면

12) 허영춘, 1999 [피해자 입장에서 본 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자료집} (미공간)

관련이 없는 죽음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의문사 사건이 단순 자살 또는 사고사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족들의 의혹제기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당신의 정치상황과 국가의 사망사건 처리 실상을 볼 때 유족들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정치상황에서, 국가권력이 죽음의 진상을 은폐해 오던 관행 속에서 젊은 병사들, 특히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들로서 징집되었던 병사들이 갑자기 죽은 채로 발견되었을 때, 야당정치인, 민주화 운동가가 갑자기 산에서, 철로 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을 때, 누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혹의 발생 책임은 1차적으로는 독재권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재권력하의 정부는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전반적인 의심을 야기했고,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를 방기함으로써 또한 의심을 야기했다.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뒤늦게나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 무관심과 침묵

의문사가 발생하였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혹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면 의문사는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의문사로 남지 않았을 것이다. 1960년 4.19와 관련있는 김주열의 죽음과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는 박종철의 죽음 모두 그 당시로서는 의문사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죽음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혹해소에 다수 사람들이 동참하여 이 문제가 전사회적인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마침내 의혹이 밝혀졌다.

4.19와 6월 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기념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 두 항쟁 모두에서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와 언론의 노력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시민 사회가 유대 의식에 입각해서 의문사 사건을 단지 유족들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할 때 그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사례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이었다.

의문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이것이 유가족의 문제로 고립되고, 전사회적인 쟁점을 형성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대부분 독재정권의 억압 속에서 무관심과 침묵

에 길들여져 있었다. 전부 그러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유가족을 도와주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언론은 계속되는 의문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다. 5.16 쿠데타 이후 독재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했다. 언론은 권력의 야만적인 통제의 희생자였다. 그러나 한편 언론사들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던 외국 차관 도입을 통하여 기업을 확장해나갔다.[13]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희생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독재권력의 수익자였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위축은 기업으로서의 언론사의 자유와 성장에 의해 보상받았고, 언론은 쉽게 여기에 적응하였다. 독재정권기 언론기업은 생존을 위해 선전도구의 역할을 해야 했고, 적극적으로 권력을 비판하지 못했다. 거듭되는 국가의 억압적인 폭력행사와 의문사가 양산되었지만 언론은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통해 화해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는 아닐 것이다. 고통받았던 유가족들과 무관심하거나 침묵했던 절대 다수의 국민들 사이의 화해가 될 것이다.

II. 의문사 발생의 역사적 추이

민주화 운동과정에서의 희생은 권위주의 통치와 저항이 충돌하는 역사적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망(자살, 의문사, 살해), 부상, 투옥 등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의 추이는 당시 국가권력이 얼마만큼 민주화되었느냐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전두환 정권기에는 국가권력이 극단적 억압을 강화하던 초기 국면보다는 1984년 유화조치가 있고, 민주화 운동이 분출되던 1985년에서 1986년 사이에 각 종 희생이 더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공으로 한국은 점진적인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희생자들

13) 1960년대 후반 중요 언론사들은 국내 금리가 26%인 상태에서 이자율 3.5-8.5%의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고속 윤전기 등을 구매하였고, 나아가 호텔 건설 등 언론사 업무와 무관한 사업에까지 사용하였다. 외국차관의 도입은 정부의 지불 보증과 연계되는 만큼 권력의 협조가 필요했다. 또한 당국은 신문용지 수입 관세율을 30%에서 4.5%로 내려 언론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강상현, 1999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9권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66-168쪽)

은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민간정권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통일운동과 광주민주화항쟁 책임자 처벌문제를 두고 국가권력과 민주화 운동이 충돌함에 따라 다수의 희생이 발생하였다.[14]

희생의 발생은 권력의 민주화 정도 내지는 억압의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민주화 운동세력의 '저항의 강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희생 중의 하나인 의문사도 민주화운동의 성장곡선과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의문사 발생의 역사적 추이를 민주화 운동과 권위주의 통치가 충돌하는 한국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개관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 의문사 사건이 특정 역사적 흐름과 연결시켰을 때 이것이 곧바로 특정 의문사 사건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권위주의 통치의 위법한 개입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설명하고자하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 상황속에서 이들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것이 왜 의심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건들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속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 의문사로 남게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사인의 문제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최종결론으로 밝혀질 것이다.

1. 박정희 정권기 민주화 운동과 의문사

한국 민주화 운동의 기본 특성은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한 4.19 항쟁에서부터 이미 윤곽이 잡혀졌다. 한국 민주화 운동은 그 주체면에서 학생, 지식인의 주도성이 대단히 두드러진다. 4.19이후 학생, 지식인 그룹은 민주화 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세력의 진출과 비중이 점차 높아졌지만 최근까지도 학생, 지식인 그룹은 한국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어떤 정형화되고, 제도화된 조직에 입각해서 운동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이고, 분산적이었다. 소규모 비공식 그룹들이 자연발생적이고, 분산적인 투쟁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독재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와해되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헌신적인 투쟁이 계속 축적되다

14) 전재호, 2003 [한국민주주의와 학생운동]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하는 책 221-225쪽

가 특정 시점에 가서는 일반 대중들의 일시적인 참여와 결합되면서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것이 특징이다.[15] 1960년 4.19항쟁, 1964년 6.3항쟁, 1980년의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화 항쟁, 1987년 6월민주항쟁 등이 이러한 흐름을 대변해주고 있다. 1980년 이후 민주화 운동의 조직화, 제도화가 전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역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기본 특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60, 70년대 박정희 정권기의 민주화 운동은 학생·지식인의 주도하고, 자연발생·분산적이었다는 한국민주화 운동의 특징을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 무렵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 지식인, 종교인 그룹이었고, 학교와 교회 및 성당이 중요 운동의 공간이었다. 이들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비조직이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명망가, 선구자로서 운동에 참여하였고, 대중적인 기반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학생운동은 일부 소그룹이 분산적으로 소규모 시위를 주도하는 형식으로서 하나의 '권'과 '운동체'로 결집되지 못했다.

종교인들의 참여는 박정희 정권기, 특히 유신체제기(1972-1980) 민주화 운동에 대단히 특징적인 현상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들 종교인들의 운동도 일부 의식 있는 목사와 신부들의 개인적인 참여나 소규모 그룹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 종교인을 대중적으로 결집하고, 이를 동원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은 조직적인 대중운동이라기보다는 일부 지사적 지식인과 명망가들의 운동이었다. 또한 그 사상도 이념적이었다기보다는 도덕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주화 운동이 대중에 호소하는 방식은 어떤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극복의 대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불의에 대한 항거'라는 도덕적인 담론을 위주로 전개되었다. 물론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그 내부에서 사정이 바뀌어갔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특성은 박정희 정권 내내 유지되었다.

. 1) 유신체제 형성기(1969-1972년 10월)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세력들은 3년 동안 군부직접통치를 했고, 1963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이른바 '민정이양'을 했다. 그 후 박정희 정권은 비록 절차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기는 했지만, 억압적이고 정부와 여당의 핵심 엘리트들이 군대의 장성출신자로 채워지는 군사독재

15) 김동춘, 1997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1 당대 73-74쪽

정권이었다.

박정희를 비롯한 5.16 쿠데타 세력은 사회혼란과 장면 정권의 무능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지만 군정 초기의 한국사회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1962년부터 장면정권기에 수립된 계획을 기초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했지만 초기에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4대 의혹 사건', 유야무야된 농어촌 고리대 탕감, 실패한 화폐개혁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박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어갔다.

1964년에 전개된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단순한 '굴욕외교 반대운동'이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의 표출이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박정희가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여기에는 박정권이 추도하는 종속적 근대화의 문제점에 대한 당시 학생, 지식인 층의 비판을 반영하고 있었다. 1964년 3월부터 본격화된 야당과 학생운동의 공세는 4.19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군사정권은 1964년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1965년 8월 위수령을 선포하여 군을 직접 동원하면서 이러한 저항을 탄압하였다. 한편 경제개발과 월남특수로 인하여 1965년경부터 경제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저항세력의 기세는 수그러들었다.

한편 1966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대남 무력공세를 강화하였던 것도 민주화 운동세력에게는 불리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1967년의 56함의 침몰사건과 포천지구 미군 군용열차 폭파사건, 1968년 1월 북한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 및 미국 정보선 푸에블로 사건, 11월의 울진, 삼척지역 무장간첩 침투 등 대형 사건들이 줄을 이었고, 이는 박정희 정권이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반공체제를 강화하여 반대 정치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박정희 정권은 상대적 안정기를 구가할 수 있었고,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통합야당 후보 윤보선을 110만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박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이 안정되자 곧바로 장기집권의 야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기도는 실질적으로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부정선거에서부터 내비쳐지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관권과 금권의 동원 같은 선거부정이 있었지만 이 선거에서는 일부 투개표 부정까지 이루어지는 등 부정선거의 양상이 매우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박 정권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1967년 선거에서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한 것은 개헌을 위한 의석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1969년 9월 13일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의 터전을 닦은 것이었다.

1971년 대통령선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치루어진 것으로 장기집권을 기도하는 박정희 정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화 운동세력의 대결의 장이 되었다. 당시 야당인 신민당 후보는 40대의 젊은 지도자 김대중이었다. 김대중은 신민당 후보지명을 받자마자 전국각지에서 연설회, 시국강연회 등을 하면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했고, 향토예비군제 폐지, 4대국 안보보장론, 남북교류, 대중경제론 등 참신한 공약을 발표했으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1971년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제도 정치권 내부에서 벌어진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야당이 여당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야당은 박정희 정권 내내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수행하였다. 당시 야당의 정치활동은 단순한 제도정치권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억압적 통치와 경제개발에서 소외된 세력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대표하고 있었다.

기존 민주화 운동세력은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1971년에 접어들어 교련반대운동을 벌이던 학생들은 4월 14일 '민주수호 전국학생청년연맹'을 결성하였다. 한편 4월 19일 재야세력들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구성하여 6,139명의 선거참관인단을 구성하였고, 기독교 학생들도 4월 20일 '민주수호기독청년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박정희 정권기 민주화 운동의 세축이었던 학생, 재야세력, 종교계 모두가 이 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고자했던 것이다.[16]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은 애초에 선거 승리를 낙관했지만 선거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선거가 접전으로 가자 크게 당황하였다. 김대중 후보의 부상에 부담을 느낀 박정희는 미국자료에 의하면 이미 1970년 11월 정일권 총리에게 김대중을 어떻게 해보라는(**'do something'**)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17] 1971년 1월 김대중 후보가 미국을 방문하러 떠났을 때 그의 집에 폭발물이 터졌고, 선거대책위원장 정일형의 집에

16) 신광영, 1999 [1970년대 전반기 한국의 민주화 운동]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254쪽

17)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전문(1970. 11. 6)> Sub-Numeric Files Pol 15-1 Kor S 5-6쪽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국은 이를 야당의 자작극이라 발표하고 사건조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야당 중견 및 하급 간부들을 소환하여 압박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미 집권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의 선거 개입 및 엄청난 선거자금의 투입이 있었다. 당시 여당은 백중세의 선거에서 여론을 의식해야 했기 때문에 야당의 하부 실무진들을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압박하여 각개 격파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선거직전인 1971년 3월 23일 동아일보는 내무부가 시장과 군수들에게 모든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대구시장은 3월초부터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미국대사관은 있을 법한(plausible) 이야기라고 했다.[18] 여당은 조직, 야당은 바람이라는 선거의 양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과정에서 하부의 야당 선거운동원들은 주로 야간에 독립운동을 하듯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일에 발생한 신민당 금산지구당 위원장 양상석의 의문사와 5월 25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발생한 목포시 대성구 1구 투표소 선거관리 부위원장 김창수 의문사 사건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1971년의 선거는 장기집권을 추구하는 박정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민주화 운동세력의 첨예한 대치 국면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두 건의 의문사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94만표 차이로 승리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부정선거하고 규정했고,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반대운동을 하여 5월에 서울대학교 일부 단과대학이 휴교에 들어가기도 했다. 9월 들어 대학가는 다시 교련반대운동의 열기에 휩싸였고, 박정희 정권은 마침내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여 무장군인을 캠퍼스에 진주시키고 무려 1,889명의 학생을 연행하였다. 그후 1971년 12월 6일 박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7일에는 시민적 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표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1969년 닉슨닥트린 발표, 1970년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 1971년 8월 닉슨의 중공방문 발표, 베트남 패전의 기정사실화 등의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한국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18) <국무부가 대사관에(1971.4.7)> Sub-Numeric Files Pol 14 Kor S

공포분위기에서 1971년 10월 위수령 선포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세력의 저항은 유신이 선포될 때까지 잠잠해졌다.

1970년과 1971년 한창 고조되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저항이 잠잠해 진 것은 남북대화와도 관련이 있다. 1971년 9월 남북적십자 회담 예비회담부터 시작된 남북대화는 민주화 운동세력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권은 한편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당시 조성되고 있는 데탕트 분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일논의를 선점해갔다. 당시 남북대화는 양측의 밀사 교환 등 철저히 정부주도로 이루어졌고, 1972년 7월 4일 갑자기 서울과 평양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을 담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북한과의 대화는 그 동안 대내적으로 조성된 위기와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 박 정권은 남북대화는 "대화 없는 체제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대내 반공체제의 강화는 남북간의 체제경쟁을 빌미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마침내 박정권은 1972년 10월 남북대화에 필요한 내부 체제정비를 명목으로 이른바 '유신'을 선포하였다.

2) 유신체제 성립 이후(1972년 10월-1979년 10월)

유신선포는 그동안 명목적으로 유지되어오던 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도 폐기되고 노골적인 박정희 일인 영구집권 체제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들의 체육관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치체제는 실질적으로 반대 정치세력의 집권을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봉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억압이 한참 강화되는 상황에도 민주화 운동세력은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못했다. 1971년 10월 위수령으로 교련반대 시위가 진압된 이후 1973년 10월까지 민주화 운동세력은 별다른 저항을 보여주지 못했다. 안보논리를 명목으로 하는 공포 분위기와 억압의 강화, 남북대화를 통한 박정희 정권의 정국 주도권 장악 등이 당시 민주화 운동을 침체시킨 중요한 원인이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이 유신체제 수립 이후 처음으로 데모를 했다. 이 시위는 서울시내 다른 학교에도 파급이 되고, 경북대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민주화 운동이 유신의 철퇴 속에서 다시 부흥하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973년 10월 16일 서울대 법대 교수 최종길이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독일유학 당시의 행적에 대해 조사받다가 고문치사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종길 사건은 군사독재정권이 민주화 운동이 고조될 때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발표되었던 간첩단 사건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1967년 부정선거 반대운동이 한참이었을 때 동백림 사건 발표가 있었고, 1971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3개의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1973년 10월 오래 동안 침체되었던 학생운동이 고개를 들자 최종길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역대 정권에 의해 발표된 간첩단 사건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한참 저항이 고조되는 시점에 당국의 간첩단 사건 발표가 많아지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된다. 간첩단 사건의 발표 횟수를 보면 1969년(15건), 1971년(11건), 1974(10건), 1985년(26건)이 두드러지게 많다.[19] 이들 연도들은 모두 민주화 운동이 고조되던 해였다. 1969년은 3선 개헌반대운동이 한참이던 때였고, 1971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며, 1974년에는 '민청학련'이 주도하는 반유신 투쟁이 있었고, 1985년에는 2.12 총선거에서 선명야당인 신민당이 대거 의석에 진출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이 힘을 얻어가던 해였다.

간첩단 사건, 공안사건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주화 운동세력을 탄압하는 행태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이어졌다. 장석구는 인민혁명당 관계자를 도피시켜준 죄로 잡혀갔다가 옥중에서 의문사하였다.

1974년 4월 13일 서울시내 10개 대학 1천여명의 학생이 가두시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전국민족청년학생연합(민청학련) 명의의 '민중, 민족, 민주선언'이 거리에 살포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시위 직후 무려 1,224명에 달하는 '민청학련 사건' 관련 학생들을 검거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불온세력에 의해 지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들은 4.19 때 혁신계 청년운동을 했던 서도원, 도예종, 우홍선,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김용원 등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하여 경북대학교 학생운동 지도자 여정남을 통해 민청학련 관련 학생들과 연계를 맺으면서 활동했다고 했다. 한편 이 것 외에도 김영장 국제기독교대 교수 간첩단 사건(4월 18일) 일본교포 유학생 김승효 간첩단 사건(5월 2일), 대학교수, 공화당원, 공무원이 포함된 30여명의 간첩단 사건(5월 6일)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소위 '인민혁명당' 관련자들은 4.19 직후 혁신계 청년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물론

19)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1994 {분단조국의 희생양, 조작간첩} (미공간) 8-15쪽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 과정에서도 별다른 증거도 없이 학생시위를 사주했고, '인민혁명당'이라는 비밀결사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사법부는 증거가 거의 없었으므로 경미한 처벌을 했지만, 유신체제하의 상황은 더욱 엄중했다. '인혁당' 주동자로 분류된 8인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으로부터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었다.

한편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잠잠했던 재야세력들도 1973년 하반기부터 전열을 정비하였다. 1973년 12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박정권은 여기에 맞서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야세력들은 1974년 11월 '민주회복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반유신 개헌운동을 이어나갔다. 1975년에 접어들어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자 해직사태 및 여기에 저항하는 언론자유수호 운동이 일어나고 3월 개학이후 학생들의 시위도 계속 이어졌다. 한국 재야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장준하는 이와 같은 반유신 운동의 고조점에서 1975년 8월 17일 산행길에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1970년대 유신체제 반대운동 과정에서 또한 두드러진 특징은 종교계 인사들의 활약이다. 박정희 정권은 안보논리, 반공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저항세력을 분쇄하였다. 종교계 인사들은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종교계라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고, 용공조작의 올가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특히 종교계 인사들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사슬에 가장 심하게 묶여있던 노동운동, 농민운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은 1970년대 노동운동에서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70년대 노동운동은 유신헌법으로 노동자의 기초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졌다. 당시 노동운동은 국가권력과 기업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노동자 대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민주노조의 사수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산업선교회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정법영 의문사 사건은 이와 같은 도시산업선교회 활동과 직접 관련이 된다.

정법영은 청주 지역의 도시산업선교회를 이끌고 있던 정진동의 아들이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세력에게는 항상 불순분자, 용공분자라는 올가미가 따라다녔고, 이는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정법영은 중학교에 다니던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훈화를 하며 공산당에 대해 말하면서 "청주에 청소부

들을 선동하는 목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제대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1977년 청주신학교에 입학했다. 1978년 아버지가 신흥제분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 조광피혁의 부당해고 문제 등으로 단식 농성에 들어가자 그의 가족들은 형사들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문사 사건이 발생했다. 정법영 사건은 유신체제하에서 한층 강화된 안보논리,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탄압이 민주화 운동가와 그 가족들에게 얼마만큼 심각한 폐해를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유신체제의 억압적 통치는 감옥 안에 있는 장기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 정권은 1973년 하반기부터 감옥 안에 있는 장기수들에게 일제식민지 유산인 전향을 대대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폭력이 해하여지고, 최석기(1974), 박융서(1974), 손윤기(1976)의 의문사 사건의 발생하였으며 1980년 청주 보안감호소에서 발생한 변형만, 김용성의 의문사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73년 가을 이후 전향공작이 강화되는 것은 대부분의 장기수들이 한국전쟁 전후에 잡힌 사람들로 원래는 무기징역형을 받아 살다가 4.19직후 20년으로 감형되어 대부분 1970년대 중반이면 출소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를 나가는 것 자체를 용인할 수 없었고, 이에 1975년 7월 날치기로 사회안전법을 만들어 이들을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키려고 했다.

당시 살인적인 전향공작의 강화는 남북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 감옥에 존재하는 장기수 문제를 직접 언급하거나 석방을 요구한 적은 없다. 당시 북한의 입장은 자신들은 남쪽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었다.[20] 1999년에도 북한은 장기수 문제를 '포로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는 정전협정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한과 대화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대화할 문제라 했다.[21]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대화 이후 유신체제가 선포되고, 역설적으로 북한과의

20)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팀, 2001 {사상전향제도의 이해} (미공간) 16-18쪽

21) 1993년 3월 김대중 정권 출범직후 나온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의 다음과 같은 논평은 북의 장기수 문제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원래 포로문제는 조선정전협정에 따라 우리와 미국사이에 토의 완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남조선 당국은 여기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중략) 미국은 이제라도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 북반부로 돌아오도록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남북회담 사무국 남북관련 자료 사이트)

체제대결, 반공이데올로기가 한층 강화되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었다. 유신체제의 선포를 전후하여 박정희 정권은 중·고등학교에서의 반공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1971년부터 대학생들에게 교련교육을 강요하였다. 이렇듯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존재 자체는 비록 이들이 감옥에 이미 갇혀진 죄수라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당시 전향공작은 박정희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주된 도구로 사용했던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라는 것과 연관을 갖는다.

이렇듯 박정희 정권기에 발생한 각 종 의문사 사건들은 그것이 일면 보기에는 고립되고, 분산된 문제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민주화 운동세력과 권위주의 통치가 대치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2. 전두환 정권기 민주화 운동과 의문사

1) 신군부 집권기(1980)

1979년 10월 26일 부산, 마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와중에서 박정희는 암살당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신체제가 청산되고, 새로운 민주적 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권력은 군부세력에게 있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실질적으로 군부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신군부는 마침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 전국확대 조치를 단행하여 정치권력의 완전한 장악을 시도했고, 여기서 맞서 싸운 광주의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5.16 쿠데타도 불법적인 것이었지만 그래도 유혈쿠데타는 아니었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신구부세력은 광주에서의 학살을 통하여 집권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통성에 더 치명적인 한계를 갖게 되었다.

위원회에 진정된 임기윤 사건과 박태순 사건은 모두 광주민주항쟁과 관련되어 있다. 임기윤 목사는 1980년 7월 광주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로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박태조는 광주민주화 항쟁에 적극 가담하였다가 내란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9개월 동안 수감되었던 사람이다. 박태조는 투

옥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출소후에도 화순군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여 5.18 관련 홍보활동 등을 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1987년 사망하였다.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 다수의 의문사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삼청교육대 사건을 들 수 있다. 삼청교육대 강제연행은 광주민주항쟁의 진압 직후인 1980년 5월 31일 만들어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사회정화위원회에서 기획되었다. 6월부터 국보위는 이른바 '불량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계획을 세우고, 내무부 등 관련 기관을 동원하여 검거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국보위는 1980년 7월 29일 "불량배 소탕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1980년 8월 4일 삼청교육대 연행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령 제13호>가 발포되었다. 삼청교육대 대상자에 대한 연행은 이미 7월말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청교육대 검거는 거의 마구잡이식에 가까웠고, 때문에 불량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연행되어갔다. 또한 신군부세력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19명의 민주노동조합 간부들을 삼청교육대로 보내기도 했다.[22]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사업의 과정에서 총 67,055명이 연행되었고, 이중 39,742명은 약 한 달간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이중 10,016명은 6개월 가량의 장기 근로봉사에 처해졌다. 게다가 그 중 7,478명은 1981년 1월 25일 계엄해제 직전에 보호감호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처분의 법적 근거는 1980년 12월 18일 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조항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에 7,478명의 사람들은 1981년 청송보호감호소가 지어졌을 때까지 군부대에 임시적으로 머무르며 강제노역을 해야했다. 삼청교육대 대상자들에게 모든 조치가 다 가혹한 것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것은 장기적인 보호감호 조치였다. 삼청교육대생들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은 아무런 재판절차도 없었고, 본인에 대한 사전통지도 없이 자의적으로 단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정배는 1981년 6월 20일 육군 5사단에 보호감호되어 있던 중 이른바 '집단 난동' 사건의 과정에서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한편 박영두는 육군 27사단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징역 10년형을 받고 청송감호소에서 복역하던 중 1983년 10월 교도관들의 집단구타로 사망하였다. 이 밖에 국방부 발표만으로도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사람은 50명에 이른다.

22) 삼청교육대에 대한 정리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팀, 2001, [삼청교육대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미공간) 참조

신군부세력은 집권과정에서 대규모 유혈사태를 불러일으켰고,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팽배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 차분히 기반을 조성하면서 권력을 장악해갔다. 삼청교육대는 유신체제와 군사독재정권의 철폐를 염원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며 신군부세력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신군부세력이 삼청교육대 사업을 실시한 이유는 우선 집권의 명분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무리 군대의 물리력을 직접 동원하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라 해도 집권을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권력에 대한 동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 신군부세력은 이른바 "정의사회구현"을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웠고, 이에 삼청교육대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정화운동을 실행하여 한편으로는 권력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곳곳에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심어 놓고 창출하였다. 이에 신군부세력들은 김종필, 이후락 등 구 여권인사를 부정축재자로 몰아 단죄하였고, 1980년 6월부터 7월 장관급 1명을 포함한 243명의 고위공직자를 비롯 총 5,418명의 공직자를 숙청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는 또 한편으로는 순화교육, 강제노역 등을 통해 무자비한 폭력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전반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당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공포에 질리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깡패 000이 체포되어 삼청교육대 갔고, 000은 반병신이 되어 삼청교육대에 나왔다는 등의 풍문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국민들은 공포감에 빠져들게 되고, 난세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되었다."[23] 삼청교육대는 일종의 폭력의 시위(demonstration)로 사람들의 저항의지를 원초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신군부의 집권에 불만스러웠지만, 이들의 힘에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때문에 그들은 감히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복종하게 되었다. 삼청교육대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민주노조관계자를 제외하고, 민주화 운동 세력이 삼청교육대의 직접적인 희생양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저항운동을 봉쇄하는 극심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23) 이덕봉, 1988 [제5공화국 정치비사] 고려기획 152쪽

2) 전두환 정권 초기 학생운동과 강제징집, 녹화사업(1981-1983)

전두환 정권의 수립에서부터 1984년 '유화조치'가 실행되기 전까지 발생한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강집, 녹화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였다. 비록 이들 사건의 발생은 군대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발생하는 맥락은 당시의 학생운동의 실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두환 정권은 과거 유신정권보다도 더욱 엄격한 권위주의 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최고 통지권자인 대통령 선출방식을 여전히 간접선거로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사법부 및 헌법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과 정당의 해산권마저 부여하였다.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통합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변형하였고, 언론기본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과한 법률을 개악하였다. 또한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을 개악함로써 노동3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 민주화운동에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학원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히 통제하고 권력에 종속시켰다. 1980년부터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는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내 시위조차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전담구역 설정 실시계획' 등 교수동원체제를 만들기도 했다. 문제학생을 특별선도 대상으로 선정하여, A급은 학과장이 월2회, B급은 지도교수가 월1회 지도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5.17 이후 계속 학원에 상주했던 경찰병력은 1981년 2학기에 철수하였지만 학원 곳곳에 사복경찰을 심어놓았다. 심지어 1982년 3월 8일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나자 문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 그리고 학장 및 당시 학생처장에 대해 경고장과 징계요구를 하달하였고, 지도교수들은 실제 징계처분을 받기까지 했다.[24] 물론 이 과정에서 1980년 부활했던 자치 학생회는 철폐되고, 다시 학도호국단 조직이 결성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이와 같은 엄격한 통제와 사찰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가장 위험한 잠재적 저항세력인 학생운동을 완벽히 봉쇄하고자 했다.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학생들은 1980년 '서울의 봄' 국면에서의 패배와 광주민주화항쟁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자괴감에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80년 9월 대학이 다시 열리자 학생들은 엄격한 통제와 삼엄한 감시 속에서 나

24) 전재호, 2003 [한국민주주의와 학생운동]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하는 책 198쪽

름대로 수면하에서 대단히 소규모이고, 분산적인 형태이지만 나름대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학생운동은 1970년대와는 몇 가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단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반미, 반외세 운동을 주장하게 되었고, 실패의 경험 속에서 운동을 보다 조직화하고, 보다 이념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났지만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분출된 '민중'의 힘을 자각하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대중운동과의 연계 또는 투신을 모색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철저히 비공식적이고,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큰 조직이 아니라 소규모 서클 수준의 조직으로 철저히 분산되어 나타났다.

1981년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시위는 비록 산발적이고,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광주민주화항쟁 1주년인 1981년 5월에는 통틀어 1백회에 가까운 시위가 전국각지의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림', '학림' 논쟁 같은 의미 있는 논쟁들이 학생들 사이에 전개되면서 학생운동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다. 유화조치가 취해지기 직전인 1983년 무렵에는 중요 대학의 학도호국단도 실제로는 운동권 학생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 정권은 완벽한 통제로 학생운동을 뿌리뽑으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완전히 비공식화되어 있고, 지하화되었으며, 분산되어 있는 학생운동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학생운동가들을 강집하고, 이들에게 순화교육과 푸락치활동을 강요하는 녹화사업을 단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탄압이 출현하였다.

학생운동가에 대한 강제징집은 1971년 교련반대운동에서도 실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지도휴학제 등을 실시하여 회유와 협박으로 학생들의 신분을 변동시키고 군대로 징집해 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강제징집은 학교당국, 병무청, 공안기관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1980년말부터 1981년에 검거된 이른바 '무림'계 학생들이 강집되어 간 것을 필두로 1981년 11월부터 1983년 말까지 447명의 학생이 강제징집되었다. 이들에 대한 징집과정에서 징병검사통지서를 징병검사 20일 전에 송부하고, 입영통지서는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규가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신병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징집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징집해 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아울러 1982년부터 강집된 학생들과 군대에 온 학생운동권 학생들에게 이른바 '녹

화사업'이 실시되었다. 녹화사업은 소속 군부대나 서울 보안사 분실에서 행해지는데 대상 학생들은 가정환경서부터 학생생활까지를 상세하게 쓰게 만드는 방대한 분량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런 다음 의식화 정도를 측정받고, 이후 체제를 긍정하게 되는 역의식화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순화작업이 보름에서 두 달간 이어지고, 순화작업 이후에는 순화를 입증하기 위해 프락치 임무가 강요되었다. 녹화사업 대상자들은 특별휴가를 받아 학교에 가서 대학 선후배를 만나 운동권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받도록 강요당했다. 이 과정에서 온갖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 자행되었고, 대상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위원회의 진정된 정성희, 이윤성, 한영현, 한희철, 김두황, 최은순의 의문사는 모두 강집, 녹화사업이 한참이던 1982년과 1983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들 사건은 비록 군대에서 일어났지만 모두 학생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학생운동 자체를 뿌리뽑으려고 했던 권위주의 통치와 철저히 비공식화되고, 소규모화되고, 분산된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면하에서 확산되고 있는 학생운동의 대치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3) 유화조치 이후 (1984년 - 1986)

5공화국의 집권세력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유혈로 짓밟고 집권에 성공하였지만, 계엄령에 가까운 억압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군사정권이라 해도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동의를 확보해야 했고, 이에 따라 1983년 후반 일련의 유화조치가 취해졌다. 물론 이 유화조치는 강경탄압만으로는 정상적인 체제의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다음에 행해지는 온건화 정책이었으므로 해직교수의 복직과 제적생의 복교 등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하여 학생운동을 기축으로 하여 민주화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1984년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조직적, 이론적으로 훨씬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유화 조치 이후 학원 내에서 운동공간을 확보하고 학원자율화 및 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학생운동은 1984년 하반기부터 '사회민주화투쟁'으로 전환하여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정권 퇴진을 직접 요구하며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하였다. 학생운동은 전국적인 총학생회의 연대조직인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과 그 산하에 투쟁조직으로서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삼민투)'를 결성

함으로써 강력한 연대투쟁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학생들은 1984년 11월의 민정당사 농성, 1985년 5월의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 정권과 체제의 상징적인 장소를 점거 농성함으로써 집권층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으며, 민주화운동 전반을 크게 진작시켰다.

1985년 2. 12총선에서 관제야당인 민한당이 몰락하고 군부정권에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됨으로써, 5공화국 집권층의 위기의식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집권 군부세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를 계기로 민주화운동 세력은 더욱 강력히 군부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을 전개시켜 나갔다.

강력해진 저항은 1985년 5월 미문화원 점거농성과 9월의 구로연대파업 등으로 나타났다. 미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은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철회를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국내외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25] 또한 1985년 9월의 구로연대파업은 1950년대 이래 최초의 동맹파업으로서, 개별 공장을 뛰어넘는 연대, 대중적인 대규모 투쟁, 정치투쟁의 성격 등 노동운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한 이 시점(1985년 8월)에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 결성되는 등 노동운동은 조직적으로도 한층 강화되고 있었다.[26] 2.12총선에서 '선명야당'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한 신민당 또한 각지의 지구당 개편대회를 '개헌 현판식[27]'행사를 치르면서 민주화운동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였다.

민주화운동 진영이 군부 독재의 퇴진을 직접 요구하고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자 정권은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수세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1986년 5.3 인천사태와 10월 건국대 사건을 계기로 군사정권은 민주화 요구를 '친북 용공'으로 매도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으면서 대규모 구속과 수배로 운동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1984-86년 기간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면서, 공안기관 등의 폭압도 더욱 거세지는 시기였다.

유화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 상대적인 의미에서였다. 대학가의 경우, 이전처럼 학원에 경찰이 노골적으로 상주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경찰병력이 대학으로 진입하여 시위나 집회를 해산하였다. 이 때 강의실이나 도서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25) 김성보, 1988 [80년대 반미운동사] {한미관계의 재인식} I 두리 92쪽

26) 김장한 외, 1989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93~94쪽

27) 신민당은 정권 교체의 방법으로서 직선제개헌을 제출하였고 1986년 8월 직선제개헌안을 확정하였다.

교수연구실에도 진압경찰이 난입하여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프락치 공작은 이전보다 더 성행하였다. 대학가에서 학생이 영장도 없이 연행, 감금되어 며칠씩 불법조사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하였고, 수배 학생을 추적하기 위해 별로 관련이 없는 학생들조차 불법으로 연행하고 고문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연행된 학생들은 가족들에게 제대로 연락조차 취할 수 없었고, 가족들은 한동안 그 행방을 몰라 가슴을 태우는 일이 숱하게 벌어졌다. 특히 1984년 이후 학생운동 진영이 전두환 정권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선언하면서 경찰 등 공안기관들은 학생운동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였고, 대학가에서 공권력의 폭력은 극에 달하였다.

이 시기 의문사 가운데에 학생운동 관련 사건이 많았던 것은 이런 정치적 상황이 초래한 결과였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 민추위와 관련하여 경찰의 추적을 받다가 도피 중 사망한 우종원 사건이나 서울대 지리학과 재학 중 의문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 의문사한 김성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이창돈 사건의 경우 사망 당시 신분은 군인이었으나 재학 중에 활동하였던 동아리 문제로 조사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빈번한 학원침탈과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의문사 사건에서 공권력 개입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하였다(우수열 사건).

한편 민주화운동, 특히 노동운동이 점차 조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노동자층에 대한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감시도 한층 강화되었다.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별 것 아닌 사건으로 연행하여 고문을 통해 조직사건을 조작해내는 '공작'이 드물지 않았으며, 신호수 사건의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이었다.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군의문사는 여전히 발생하였다. 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될수록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입대한 군인들은 더욱 힘들게 군생활을 해야 했다(임용준 사건). 구타 관행은 근절되지 않았고 선임자나 상관들에게 부당하게 학대당하다 의문사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허원근 사건 등). 그러나 군의 폐쇄성은 여전한 가운데 사건의 은폐조작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특히 군의문사가 늘어나게 되는 배경에는 5공화국 들어서 군 정보기관으로서 보안사령부가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건의 은폐조작은 보안부대의 묵인이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군 수사 기관에서는 자살이라고 하지만 수사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보안부대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하므로, 많은 죽음이 의문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

이었다.

4) 6월 민주항쟁과 대통령선거 국면(1987년)

활발해지는 민주화운동에 대해 물리적 탄압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던 권위주의 정권은 결국 살인정권으로서 본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1987년 1월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박종철군이 경찰의 고문 끝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경찰 수뇌부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다가 그마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됨으로써 정권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정권은 야당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거듭되는 직선제 개헌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4.13 호헌조치라는 강경대응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4.13 호헌조치는 오히려 극심한 반발을 초래하였고, 정권은 전국민적인 항쟁에 봉착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은 결국 군부정권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직선제를 수용하는 6. 29 선언을 발표하게 만들었다.[28]

6월 이후 정국의 진행에서 2가지 중요한 국면이 전개되었다. 우선 하나는 7~9월의 노동자대투쟁이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대중적 투쟁이 전개되었다. 1986년 276건에 불과했던 노동쟁의가 1987년 3,749건에 이르고 그 중 2,552건이 8월에 집중되어 있었다.[29] 이는 한국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운동은 대투쟁 이전부터 점차 본격화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공안기관과 독점자본에 대한 탄압도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노동조합의 민주화는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었고, 회사나 공안기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할 일이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의 선거는 민주적 노동운동이 가장 첨예하게 권력과 대립하는 문제 중 하나였다. 1987년 6월 실종되었다가 1988년 3월에야 시신으로 발견된 창원 대우중공업 노동자 정경식 사건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의문사 사례이다.

둘째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이다. 민주화운동세력은 군부정권의 퇴진을 위해 투쟁하였지만,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이루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분열된 야당은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지원하는 여당 후보를 이길 수

28) 손호철, 1997 {현대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사회평론, 388쪽

29) 조희연 편, 2003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운동],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268쪽

없었다. 13대 대선에서는 물론 군사 정권의 야권 분열과 지역분할 공작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구로구청 사건에서 드러나듯 투표과정에서 광범위한 관권, 금권 개입이 없었다면 노태우 후보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의문사 사건도 발생하였다. (정인택 사건)

특히 군부대에서는 군부 출신 후보에 대해 지지를 강요하는 정신교육이 빈번하였고, 투표과정에서 상관들이 직접 특정후보에 투표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부대내의 부재자 투표에 관련된 의문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정연관 사건), 운동권 출신 사병에 대한 보안사의 특별관리와 관찰 역시 여전하여 돌연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최우혁 사건).

3. 노태우 정권기 민주화 운동과 의문사

1) 여소야대 정국과 공안정국(1988-1990년 1월)

1988년 4월 26일 총선에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세 야당이 획득한 의석이 여당인 민정당보다 더 많은 여소야대 국회가 성립하였다. 여소야대 정국은 87년 대선에서 드러난 지역주의 구도가 고착되게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야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광주청문회'와 '5공비리 청문회' 등을 통해 광주학살의 실상과 5공화국 정권의 부정부패가 폭로되면서 5공화국에 태생적 기반을 둔 노태우 정권으로서는 더욱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전두환의 백담사행을 둘러싸고 군부 세력도 내분을 일으켜 이전과 같이 단일한 진영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30]

여소야대와 청문회 정국은 대선 패배와 그 과정의 후유증으로 분열되어 있던 민주화운동 진영에게 조직을 재정비하여 국민적인 비판여론을 민주화요구로 집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9년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결성되어 전체 운동진영의 구심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각 부문 운동이 이전 시기보다 훨씬 활성화되었으며 새로운 부문에서 민주화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8.15남북학생회담' 등 남북 학생 간의 직접교류와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30)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당대 184쪽

내세우며 시작한 통일운동은 분단체제 하에서 반공이데올로기의 핵심에 도전하는 것이었지만, 그만큼 지배세력을 민감하게 자극하는 것이었다.[31] 여소야대 정국과 민주화운동의 강력한 도전에 어려움을 겪던 6공화국 정권은 19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체제수호'를 명분으로 하는 공안정국을 조성하였다. 1989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은 각의에서 "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폭력혁명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법치질서를 이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민주주의의 앞날은 물론 나라의 운명도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자제하는 단계가 분명히 지났다."고 강경한 대응을 지시하였다.[32] 그리하여 문익환 목사, 서경원 의원, 임수경 양 등 방북인사는 물론이거니와 학생운동, 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이 통일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1987년의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급속히 연대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1988년 상반기에 다수의 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1988년 6월에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가 건설되었고, 188년 하반기에는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가 만들어졌다. 공안정국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 속에서도 노동운동의 조직화는 계속되어 결국에는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건설되기에 이르렀다.[33] 한편 1989년 교사들이 참교육 실현을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운동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런 노동운동의 정비는 노동현장에서의 투쟁을 토대로 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많은 사업장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생존권 투쟁의 차원에서부터 파업이 시작되었다. 공안당국은 직접 경찰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해산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측의 구사대 폭력을 묵인 방조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은 노골적인 폭력에 희생당하였다.

·이 시기 의문사는 이렇게 민주화운동 진영과 체제수호를 내세운 공권력이 정면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1989년 5월 전남지역 공안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수배 중이던 이철규군이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의문의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공안정국 하의 대표적인 의문사 사례였다. 특히 이철규군은 『민주조선』 편집위원장으로

31) 윤지훈, 2001 ['반공규율사회' 변화에 따른 통일담론과 통일운동 고찰]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32) 박원순, 1997 {국가보안법연구} 2, 45~46쪽

33) 조돈문, 노광표, 2002, [억압적 노동통제와 국가폭력·인권침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학술진흥재단 특별정책과제 보고서) 90쪽

북한바로알기 운동과 관련하여 공안 당국의 집중적인 추적을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철규 의문사의 파동이 진정되기도 전인 1989년 8월 또다시 중앙대학교 안성교정 학생회장이었던 이내창군이 또 거문도에서 의문사하였다. 이내창군의 죽음에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들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짙으며, 당시 활발히 전개되던 민중미술운동에 대한 공작과 탄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 현장에서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이 시기에는 노동운동과 관련된 의문사가 급증하였다. 특히 구사대 폭력 등에 의해 희생되거나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탄압하는 회사측에 맞서 싸우다가 의문사당한 사례가 늘어났다.(문용섭, 오범근, 이재호, 임태남 사건 등) 이 시기 노동당국과 공안기관들은 철저히 회사측의 편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에 몰두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회사나 당국의 관련사실이나 책임을 감추기에 급급하였다.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 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침해당하는 현실 속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 그 배후에 공권력의 개입이 항상 의심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도 군의문사는 계속 발생하였다. 여전히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군 조직하에서 부대 지휘관이나 군 수사기관들은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들을 자살로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특히 입대 전에 학생운동 경력이 있었던 사병들의 의문사 문제가 다수 제기되었다(우인수 사건 등).

2) 1991년 5월 투쟁(1990. 1~1992)

1990년 1월 22일 여당이던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여소야대의 구도는 깨어지고 거대여당이 출현하게 되었다. 3당합당으로 지배층은 제도권 정치의 틀에서는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면서 위기탈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략적인 3당 합당은 시민사회 전반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하게 되었다.

먼저 1990년 이후 학생운동에서는 통일운동, 민주화 투쟁과 함께 학내 민주화 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학생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면서 전사회적인 민주화운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학재단들은 지역의 검찰과 경찰 등은 물론 심지어 폭력배들과 결탁하여 학생운동을 억압하였고, 동우전문대

학생회장이던 김용갑군의 의문사 사건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1989년 공안정국을 통과한 노동운동 진영은 3당이 합당한 바로 그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을 창립하였다. 이에 거대여당을 형성한 노태우 정권은 강화된 노동운동부터 분쇄하고자 하였다. 정부 당국은 노동현장에서 조합의 생존권 투쟁조차 허용하지 않는 한편, 전노협의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이에 공권력과 전노협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 진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90년 4월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이른바 골리앗 점거농성 투쟁을 들 수 있다. 현대노동자들의 농성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공권력 투입에 의해 강제 진압되었는데, 이에 전국의 155개 노조, 12만명의 노동자가 총파업으로 저항하였다. 한편 1990년 5월 KBS 노동조합의 방송민주화 투쟁을 계기로 '업종노동조합연맹회의'가 결성되었고, 1990년 12월에는 대기업 노조들이 중심이 되어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연대회의'가 결성되었다. 공안기관들은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와 같은 노동조합들의 연대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였고 이를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와해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였다.[34]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의문사 사건이다. 전노협과 연대회의에서 활동하다 1991년 2월 구속되었던 박창수 위원장이 안기부로부터 집요한 전노협과 연대회의 탈퇴 공작을 받던 중 1991년 5월 병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것이다.

한편 박창수 의문사 발생 직전인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군이 사복 경찰 진압조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양 등이 잇달아 분신한데다, 5월 6일 박창수 위원장마저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1991년 5월 투쟁이 전개되었다. 5월 투쟁은 정권의 탄압에 항의하고 투쟁을 촉구하는 잇단 분신 가운데서 더욱 격렬해졌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김기설 유설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정원식 총리서리에 대한 밀가루 투척사건을 기화로 이데올로기 공세와 대규모 탄압을 병행함으로써 위기를 탈출하였다.

한편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이후 보안사는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34) 전노협백서 발간위원회, 1997 {전노협백서} 81~98쪽

실제로 기무사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공작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것이 1992년 박태순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보안사령부가 실제로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김영환 의문사의 경우에도 보안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장병들은 항상 특별한 관찰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런 와중에 남현진, 박성은 등의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4. 김영삼 정권기 의문사 (1993~1997)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였다. 비록 '위로부터의 민주화'라는 한계를 지니기는 하였지만, 5.16 쿠데타 이후 처음 문민 출신으로 선거를 통해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이전의 군사 정권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집권 초기 김영삼 정부는 군부 내에서 하나회 인맥을 제거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의 이른바 '조문파동'을 계기로 김영삼 정부는 보수적인 집단에 의해 지배되었고 의문사 사건들도 이 때를 즈음하여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민정권 하에서도 경찰, 안기부 등 공안기관들은 물론이고 관료집단도 여전히 권위주의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권위를 앞세우는 강제진압과 철거는 이덕인 의문사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교육당국의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 하에서 사학재단은 여전히 전횡을 휘두를 수 있었다.

문민정부 하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의문사는 김준배 사건이었다. 1993년 학생운동 진영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결성하였고 한총련은 자주통일투쟁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총련의 이러한 노선은 1994년 조문파동 이후 조성된 신공안정국 이후 정권과 정면충돌하게 되었고, 그것은 1996년 이른바 연세대 사건을 발생시켰다. 1996년 8월 제7차 범민족대회를 위해 연세대에 집결한 한총련 학생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5,848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어 465명을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후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으며 한총련 간부 학생들은 경찰의 집요한 추적 대상이 되었다.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지명 수배를 받던 김준배군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프락치 공작을 펼쳤으며 결국은 경찰의 폭력에 의해 김준배군이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경찰

등 공안기관들이 이전의 행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가폭력에 의한 시민의 희생은 여전히 가능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II. 역사적 맥락에서의 진상규명 — 무엇이 역사의 진실인가?

진상규명은 여러 가지 차원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위원회에 부여된 진상규명 작업은 사법적인 차원의 실체적 진실의 확인내지는 민원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파악과는 다른 과거청산의 일환으로서의 역사적 진실규명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진상을 규명한다고 했을 때에는 몇 가지 점검해 볼 문제가 있다.

1. 진상규명의 범위

의문사위원회는 군사독재정권기 광범위한 인권유린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85건의 의문사 사건만을 다룬다. 그것도 위법한 공권력이 개입되어 있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의문사만을 다루도록 법에 명시되었다. 또한 여기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개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은 1969년 박정희 정권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개헌을 한 이후에 벌어진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를 의미한다. 이 법에 의하면 1969년 이전의 저항운동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러한 시기 구분이 어떠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 민주화 운동의 개념을 위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문구로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이다.

외국의 진실위원회 활동과 비교할 때 과거 인권유린 중에 이렇게 조사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진실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이룩하려면 가급적 과거 인권유린의 실상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보편적으로 요청되고 있다.[35] 이

35) Prischilla B. Hayner. "Fifteen Truth Commissions - 1974 to 1994: A Comparative Study", *Human Rights Quarterly*, Vol 16, No. 4, Nov. 1994. PP636-639

러한 면에서 의문사 위원회의 조사범위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국가권력의 위법한 개입의 협의가 있는 의문사 중에서도 민주화 운동관련자만 조사하기로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더욱 그 범위를 협소화시키고 있다.

일부 다른 나라의 진실위원회의 경우는 위원회가 조사 범위를 결정하고, 각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할 사건과 하지 않을 사건을 선별하였으며, 조사된 사건도 선별해서 보고서에 반영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36]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의문사 위원회의 활동은 조사범위라는 측면에서는 법률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 당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범위의 문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지난 위원회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일부 조사관들은 의문사 사건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초점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두었다. 즉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냐, 사고사이냐, 아니면 타살이냐 라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이다. 반면 일부 조사관들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비롯하여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발생이후에 국가기관에 의해 진상이 조작, 은폐되는 과정, 특히 이러한 조작과 은폐를 주도한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과거 독재정권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정치적 환경 및 국가제도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조사범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어떠한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위원회의 진실규명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한다면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근본원인, 이러한 사건이 의문사로 남게 된 역사적 배경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은폐되거나 잘못 처리되어 의문사로 남게 사건발생 이후의 문제도 중요한 규명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의문사 사건의 실체만이 아닌,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보다 광범한 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 진실규명이라고 할 때 그 범위는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이 될 수밖

36) Prischilla B. Hayner. 2001. *Unspeakable Truths-Confronting State Terror and Atrocity*. New York&London. Routledge. pp72-74

에 없다.

2. 입증의 수준 - 어떠한 진실인가?

진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흔히 법정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the truth beyond reasonable doubt)을 추구한다. 이는 증거로써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진실위원회가 추구하는 진실은 이러한 차원의 입증된 진실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술된 진실(narrative truth) 차원이었다. 즉 대부분의 기존 진실위원회는 희생자 및 가해자들의 광범위한 증언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남기는 데에 주력하였다. 다른 진실위원회와 비교할 때 비교적 강력한 권한을 가졌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남아공 TRC가 규명한 진실의 차원도 진술된 진실이었다.[37] 때문에 일부 논자들은 남아공 TRC가 보고서에 담은 진실의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한다.[38]

의문사위원회는 85개의 매우 특정한 사건을 다루고, 이미 이 사건에 2년 가까운 기간과 100명 넘는 상근 인력이 투입되었다. 따라서 의문사위원회의 사건조사는 보다 세밀할 수밖에 없었고, 증거정책(Proof Policy)도 다른 외국의 진실위원회에 비해 더 엄격한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술된 진실 차원의 진실규명은 의문사 위원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가 법정에서 추구되는 진실차원의 엄밀한 증거로서 입증되는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증거로써 완벽하게 입증된 진실이, 즉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진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한 진실보다 더 설득력 있고, 신뢰가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진실위원회 방식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정치적 역관계와 방법론을 볼 때 진실위원회가 법정과 같은 차원의 진실규명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사법적인 차원의 진실 규명은 사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소환권, 압수수색권 등 강제

37) 2001년 3월 18일, 남아공진실위원회(TRC) Mohamed Fazel Randera 위원이 한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하여 행한 연설 참조.

38) Anthea Jeffery, 2000. "The Truth About The Truth Commission". *Human Rights.* (Spring).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입증의 수준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의 수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진실의 수준도 그것을 밝히는 사람들에게 위임된 권력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권한도 없으면서 사법적 차원의 완벽하게 입증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진실위원회들은 강제수사권을 갖지 못하였다. 남아공 위원회의 경우 소환권과 압수수색권을 법률적으로 갖기는 했지만 진실위원회의 구조하에서 이러한 권한들이 제대로 발휘되기는 어려웠다. 특히 한국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대상이나 범위로 볼 때에는 남아공 위원회보다는 더 엄격한 차원의 증거가 요구되는 진실규명이 필요하지만 조사 권한은 남아공 위원회보다도 더 약하다. 조사에 필요한 법적 권한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입증된 진실을 규명하라고 모순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실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 또한 진실을 은폐하는 논리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항상 과거청산이 문제가 될 때마다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명확한 증거를 요구해왔고, 이는 해방직후 반민특위 활동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의문사 사건은 이미 대부분 공소시효가 경과할 정도로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설사 강제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찾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미 목격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한 이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명확할 수는 없다. 또한 의문사 사건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 쟁점이 되었고, 그때마다 조사되면서 관련 증거들이 이미 폐기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차원의 증거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법정에서의 진실은 범죄자의 유무죄를 확증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진실위원회는 사법처리와 연계를 갖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과거 인권유린의 실상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그것이 발생했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그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따라서 개인의 유무죄를 판정하는 차원의 진실규명에 한정될 수는 없다. 이는 좀 더 포괄적인 차원의 진실이어야 한다.

역사적 차원의 진실규명이 추구할 수 있는 진실의 수준은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추구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벗어난 진실과 진술된 진실(narrative truth)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진실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수용할 수 있는 진실(acceptable truth)이라 표현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에 갖고 있는 상식과 판단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차원의 진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의 진실은 법정에서 추구되는 진실보다는 사람들이 흔히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언급되는 차원의 진실, 즉 합리적인 추론을 입증해줄 수 있는 차원의 증거를 갖고 있는 진실이라고 생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여서 이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한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설명과 추론이 가능할 정도의 근거를 갖고 있는 진실이다. 이러한 근거는 의문사 사건에 대해 좀 더 넓고, 총체적으로 접근할 때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진실의 구축은 역사적 차원의 진실규명이라는 면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를 갖고, 미래의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맺음말

의문사 사건을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습득하고 이를 의문사 사건과 연결시켜 배경을 설명하는 작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조사를 위해 필요하고, 위원회의 판단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전부는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특정 사실에 접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더 총체적이고, 좀 더 넓은 안목에서 개별 사실에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의문사 사건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 실체적 진실이 어떠하던지, 즉 자살이든 타살이든 간에 당시 전개되었던 권위주의 통치와 민주화운동이 부딪치는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다각도로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역사적 맥락에서, 즉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

개별사건의 자타살 여부를 확증하고, 범인을 잡아내는 작업은 사법적 차원의 진실규명에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청산과 관련된 진실규명은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진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이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하에 인권유린을 불러일으켰던 각종 구조적 관행적 문제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상규명의 범위와 방법론도 여기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역사적 의미를 갖는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부록 인권탄압, 민주화 운동 관련 연표

* 1969년

1. 8 공화당 3선개헌 공식 검토 발표
1. 20 한글전용 반대한 교수 파면
4. 4 내무부 주민등록증 휴대 의무화 법안 마련
4. 8 국회 문교부장관 해임안 가결 (공화당 항명파동)
4. 15 공화당 항명파동으로 양순직 등 5명 제명
5. 5 신민당·재야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 준비위 결성
5. 14 중앙정보부, 김규남 의원 등 60명의 영국 거점 국제간첩단 사건 발표
6. 12 서울대 법대생 헌정수호 선언
6. 16 서울법대 3선개헌 반대 농성, (이후 여러 대학 시위)
6. 17 서울대 문리대생 개헌반대 철야 농성
6. 18 서울공대·고대생 개헌반대 성토
6. 20 김영삼 의원 피습 사건 (초산테러)
6. 25 훼어차일드세미코어 노동자 3,300여 명, 800명 집단해고 반대 파업
6. 28 고대생 개헌반대 가두 시위
7. 3 3선개헌 반대 데모 전국 확산 (대학생 138명 연행)
7. 10 통혁당 관련 김종태 사형집행 (11. 4 권재혁·11. 6 이문규·11. 28 윤상수·1972. 7. 15 김질락 각각 사형집행)
8. 1 대구고 데모주동학생 16명 퇴학 처분
8. 30 병무청, 데모 주동학생 입영영장 발부 물의
9. 9 섬유노조 방림방적·태평방적·금성방적 파업
9. 14 공화당 3선개헌안·국민투표법안 단독으로 변칙 통과
9. 22 데모 인책으로 경기고교 교장·교감 해직
10. 3 서울대, 개헌반대 데모로 처벌된 14명 전원 구조
10. 4 신민당 예비군 정치적 이용 비난
10. 6 문교부, 개헌반대 데모로 처벌된 고교생 79명 전원 구조
10. 24 휴강한 대학의 법정수업일수 180일로 단축
11. 7 외기노조 감원반대 쟁의
11. 29 문교부, 1970년부터 고교 이상 각급 학교 군사훈련 실시키로 확정
12. 19 예비군 기피자 70만 명 적발
12. 20 '외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쟁의조정에 관한 특례법' 국회 통과 (노동 3권 제한)

* 1970년

2. 11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대한일보기자 피습사건 규명 촉구

2. 14 정부, 노조의 정치간여 금지
2. 21 한국화이자 종업원 노조설립인정 요구 단식농성
2. 27 부두노조 콘테이너수송방식도입 반대 파업 결의
4. 8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33명 사망·30명 중경상)
4. 23 검찰 거주이동신고 불이행 입건 방침 발표
6. 2 신민당사 수색, '오적'('사상계' 5월호 발표)을 게재한 기관지 '민주전선' 압수
6. 21 중앙정보부, 고려대에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김낙중 등 11명 구속 발표
7. 7 '오적' 필화사건 첫공판 (피고 김지하·부완혁 등)
8. 15 동베를린 간첩단 관련 윤이상·이응로 등 10명 특별 사면
8. 15 수경사, 조선일보기자 구속
8. 27 미 국방성, 주한미군 1만 명 철수완료, 1만 명 추가철수계획 발표
9. 17 내무부 전투경찰대설치 법안 각의 상정 (12. 24 국회통과)
9. 24 서울대병원 간호원 임금인상 요구 쟁의
9. 29 '오적'필화사건과 관련하여 '사상계' 등록 취소
10. 18 송추서 캠핑하던 소년들이 간첩으로 오인받아 3명 사살·1명 중상
11. 13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 근로조건개선 요구 분신자살, 이후 학생데모 유발
11. 14 서울대 법대생, 전태일 분신자살 관련 '민권수호 학생연맹 준비위원회' 결성
11. 17 노동청, 전태일 분신자살 관련 근로감독관 3명 해직,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표명
11. 18 서울 상대생 2백여 명, 근로조건 개선 요구 무기한 단식 농성
11. 20 서울대 법대·문리대에서 전태일 추도식
11. 27 청계피복 노동자 5백여 명 연합노조 청계피복 노동조합 결성
12. 2 연대생 5백여 명 교련강화 반대 및 언론탄압 반대 성토대회

* 1971년

2. 12 '다리'지 필화 사건
3. 17 고려대 총학생회 군사교련수강 거부 선언
3. 26 서울대생, 동아일보사 앞에 모여 '언론화형식' 실시
4. 6 서울대생·고대생·성대생 교련결사반대 시위 (이후 교련반대 시위 격화)
4. 15 동아일보 기자들 '민주자유언론수호선언' 발표 (이후 전국 14개 언론 기자들이 '언론자유수호선언' 발표)
4. 19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4. 27 7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당선
4. 27 양상석(진정 1호, 진상규명 불능) 행방불명 된 후 30일 인근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
4. 28 신민당 4·27 대통령 선거를 불법선거로 단정
5. 3 서울대생 부정선거 규탄시위
5. 7 서울대 문리대생 '사이비 민주주의' 화형식
5. 25 8대 국회의원 총선거
5. 27 문교부, 서울대 문리대·법대·상대·사대 휴업령
6. 21 김창수(진정 제9호, 인정) 철로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25일 사망
7. 28 사법파동 발생

8. 10 광주단지 주민 3만여 명 소요사태 발생
8. 12 최두선 한적(韓赤) 총재, 남북이산가족 찾기를 북적(北赤)에 제의
8. 21 서울대 상대·공대 교수들, 대학자율 입법화 요구 '자주선언' 채택 (이후 각 대학에서 학원자율화 요구 계속)
8. 27 서울대 12개 단대 학생회장, 자율선언 지지·교련수강 거부 결의
9. 15 고대 총학생회, 학원자주 선언 대회
9. 15 파월한진기술자 KAL 빌딩 사건 (체불임금 청산 문제)
9. 20 남북적십자사 첫 예비회담 개최
9. 28 연대생 1천여 명, 교련반대 성토대회
10. 5 수도경비사 군인 30여 명 고려대 난입사건 발생 (이후 각 대학에서 규탄 계속)
10. 11-14 각 대학에서 5만여 명이 가두시위
10. 15 서울 일원에 위수령 발동, 무장군인 학원 진입. 1,889명의 학생 연행
10. 19 정부, '학원질서 확립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명령' 공포
11. 9 김석조(진정 제76호, 기각), 행방불명된 후, 12일 인근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
12. 6 박정희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
12. 27 정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 공포 (시민적 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박탈)

*** 1972년**

3. 28 엠네스티 한국지부 결성
4. 11 통혁당 재건 관련 고정 간첩 9명 검거 발표
4. 21 이수영(진정 제74호, 기각), 프랑스대사관저에서 식칼에 찔린 채 발견, 후송중 사망
7. 4 남북공동성명, 서울·평양에서 동시 발표
8. 3 사채동결과 재벌특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8·3조치) 발포
8. 29 대한적십자 대표단·기자단 일행 54명 평양 도착
9. 12 북한적십자 대표단·기자단 일행 54명 서울 도착
10. 12 남북조절위원회 개최 (판문점)
10. 17 박정희 대통령, 전국비상계엄 선포 (10월 유신)
10. 25 정부, 새마을운동계획 발표
11. 21 유신헌법 국민투표로 의결
12. 23 통일주체국민회의,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

*** 1973년**

1. 대한모방 노동자들 강제노동 폐지투쟁 / 경성방직 노동자들 노동조건 개선투쟁
1. 21 경인에너지 노조결성 투쟁
2. 27 9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4. 남산음악당 부활절기도회 사건 (박형규 목사 등 구속)
6. 21 고대 NH(민우지) 사건으로 12명 구속, 고대 검은10월단(야생화) 사건으로 7명 구속, 전남대 함성지 사건으로 12명 구속
6. 23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외교정책 7개항 발표 (6·23 선언)
7. 1 남한제지 신탄진 공장 노조결성 투쟁
7. 6 김대중,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회'(한민통) 미국본부 결성
7.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시행령 공포
8. 8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8. 28 남북조절위 김영주 평양측 공동위원장, 남북대화 중단 발표
9. 삼립식품 노동자들 임금인상 요구 파업
10. 2 서울대 문리대생 유신반대·김대중사건 해명요구 시위 (이후 각 대학으로 파급)
10. 4 서울대 법대생 200여 명 유신체제 성토집회 및 교내시위
10. 7 동아일보 기자들, 서울대 10월 2일 시위를 보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여 철야농성
10. 19. 최종길(진정 제8호, 인정), 중정 건물 앞에서 사체로 발견
11. 5 경북대생 200여 명 유신체제 성토집회 및 가두시위
11. 5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시국선언.
11. 5 동아일보 기자들, 같은 날의 경북대생 시위와 시국선언 기사가 보도되지 않자 철야농성
11. 7-9 서울대 각 단과대학 동맹휴학 결의와 반유신결의문 채택
11. 12 이대생 4천여 명 결의문 채택과 검은 리본 부착 결의
11. 13 고대 학생회 간부들 단식농성 돌입. 감신대·중앙대·서울대 문리대 동맹휴학 돌입
11. 15 고려대생 2천여 명 가두시위 (경찰과 투석전 및 최루탄전)
11. 20 동아일보 기자들 언론자유의 수호를 결의 (이후 각 언론사에서 언론자유 수호 결의)
11. 26 연대·성균관대·숭전대생 3천여 명 시위
11. 29 기자협회, 사실보도와 언론제재배격 등을 주장하는 결의문 채택
12. 3 동아일보 기자들 '언론자유수호 제3선언문' 발표 (김대중사건 보도통제 항의)
12. 13 윤보선·김수환 등 재야인사 11명 시국간담회 개최
12. 24 장준하·백기완, 개헌청원 1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12. 27 각계 인사들 시국간담회 개최, 박대통령에게 건의문 발송 결의 (31일 발송)
12. 29 박정희 대통령, 개헌서명운동 즉각 중지 담화 발표

*** 1974년**

1. 원풍모방 회사재건 투쟁 시작 (75년 1월까지 계속)
1. 8 대통령 긴급조치 1호(헌법논의금지)·2호(비상군법회의 설치) 선포
1. 14 긴급조치 3호 선포
1. 15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장준하·백기완 구속
2. 반도상사 노조결성 투쟁 (4월까지 계속)
2. 25 서울지검 공안부, 이호철·김우종 등 문인간첩단 구속
2. 25 상업은행 노조 파업
2. 26 인천 반도상사 근로자들 파업

3. 7 동아일보, 출판노조 동아지부를 결성한 간부 11명과 기자 2명을 해고
3. 15 중앙정보부, 통혁당 경북위원회 사건 발표
4. 3 서울시내 10개 대학 1천여 명 가두시위, 민청학련 명의의 '민중·민족·민주선언' 발표, 긴급조치 4호(민청학련 관련) 선포
4. 4 최석기(진정 제56호, 기각), 대전교도소 수형자. 교도소 전향공작반의 사주를 받은 일반수형자로부터 전향강요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였다.
4. 13 민청학련 사건 발생, 배후에 인혁당·조총련·공산당이 있다고 발표
4. 18 중앙정보부, 김영장 국제기독교대 교수 등 5명을 간첩 그룹으로 검거
5. 2 중앙정부부, 조총련 간첩혐의자로 서울대학교에서 유학중인 김승효 체포
5. 6 치안본부, 대학교수·공화당원·공무원이 포함된 30여 명의 간첩단 적발 발표
6. 14 장석구(직권 84호, 인정) 연행, 서울구치소 수감중 1975년 10월 15일 사망
7. 13 민청학련사건 선고공판, 32명 중 이철 등 7명에게 사형선고
7. 16 강신옥 변호사 민청학련사건 변론 중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지학순 주교 기소
7. 20 박융서(진정 제57호, 기각), 대전교도소 수형자. 특별사동 근무자와 일반수형자로부터 전향강요를 당하였다. "전향강요 말라"는 혈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대전교도소 및 중앙정보부는 박융서를 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 가매장하였다.
7. 23 지학순 주교 '양심선언' 후 연행
7. 국제약품 노조결성 투쟁
8. 15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영부인 육영수 사망
8. 23 긴급조치 1·4호 해제
9. 23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유신규탄 성명
9. 23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식 발족. 기도회 후 가두시위
9. 23 이대생 4천여 명 구속학생 석방요구 학내집회·서명운동 (이후 구속학생 석방 요구 각 대학으로 파급)
10. 10 고대생 2천여 명 구국선언문 발표 후 시위, 서울대 상대 동맹휴학
10. 14 서울과 지방의 각 대학에서 구속학생석방·유신철폐 시위 (11월까지 계속)
10. 15 15개 대학 당국 휴교 결정
10. 24 동아일보 기자 자유언론실천 선언
11. 11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 12개 교구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개최. 7천여 명 가두시위
11. 18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
11. 20 구속자가족모임, 결의문과 호소문 발표 후 단색투쟁 결의
11. 27 각계 명망가 71명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 개최
12. 18 조선일보, 유신체제에 대한 회사방침에 반발 기자 2명을 파면
12. 25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12. 26 정부,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을 시작, 광고주들이 무더기로 광고 해약

* 1975년

1. 1 긴급조치 3호 해제
1. 10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강령을 채택 후 농성

1. 22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발표
2.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앙과 자유수호를 위한 연합예배' 개최. 4천여 명 참석
2. 12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가결), 재야는 국민투표 거부
2. 15 긴급조치 1·4호 위반자 중 인혁당 관련자와 반공법 위반자 제외하고 석방
2. 17 2·15 조치로 출감한 인사들이 고문 사실을 폭로
2. 21 문교장관, 2·15 조치로 석방된 교수와 학생의 복직·복교 불허 발표 (이후 이들의 복직·복교 문제와 언론자유 문제 때문에 각 대학에서 시위 계속 발생)
3. 1 민주회복국민회의,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민주국민헌장' 발표 (독재권력과의 투쟁 선언)
3. 6 조선일보 기자들 자유언론투쟁을 결의하고 선언문 채택, 다음날 5명 해임
3. 8 동아일보 4개 부서 폐지하고 기자와 사원 18명 해임, 기자들 제작거부
3. 12 동아일보, 제작거부 주동자 17 명 해임
3. 18 해임 기자들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단식에 돌입
3. 19 국회, 외국인 상대의 반국가 언동을 규제한 형법 개정안 통과
3. 21 해임당한 조선일보 기자들도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
3. 24 서울대생 1천여 명 '학원민주화를 위한 성토대회' / 연세대 외 3개 대학 학생들 1,200여 명 교내시위
3. 27 연세대생 4천여 명 교문 앞 시위
3. 27 동아일보가 송건호 편집국장을 면직하고, 12명을 추가로 해임, 7명 무기정직
3. 31 고려대생 1,500여 명 '반독재구국선언문' 낭독 및 농성
4. 7 고려대생 가두시위 / 서울대·서강대·외대·국민대생 들 교내시위
4. 8 고려대생 2천여 명 가두시위
4. 8 긴급조치 7호(고려대 관련) 선포, 고려대 휴교·교내에 병력 투입
4. 9 대법원 선고 다음날 인혁당 관련자 8명 사형 집행 (민청학련 9명은 무기징역)
4. 11 서울대 농대생 김상진, 양심선언 후 할복자살
4. 11 동아일보가 기자 75명을 추가로 무기정직
4. YH무역 노조결성 투쟁
5. 12 동아투위 소속 기자 3명 구속
5. 13 긴급조치 8, 9호 발동 (유신헌법반대행위 금지)
5. 20 박정희 대통령, 각 대학에 학도호국단 결성과 군사교육 강화를 표명
5. 22 서울대생 1천여 명, 김상진 추도식 이후 가두시위
6. 3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학생총연맹 사건으로 15명 처벌
6. 15 중대 지하신문 배포 사건으로 5명 처벌
7. 11 내무부, 사회안전법 적용 보안처분 대상자가 약 1천2백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
8. 17 장준하(진정 제14호, 진상규명 불능), 약사봉에서 변사체로 발견
9. 22 민방위대 발대식
10. 10 신민당 김옥선 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정부 비판 (10. 13 의원직 사퇴)
10. 10 이화여대 '새벽'지 배포 사건으로 3명 처벌
10. 홍사단 아케데미 유인물 배포 사건 / 서울 의대 간첩단 사건
10. 15 장석구(직권 84호, 인정), 서울구치소 수감중 사망
12. 25 문교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전국 8개 대학 85명 퇴학, 57명 구속 발표

* 1976년

1. 정화영·김영준 구속 사건
2. 동일방직 노조수호 투쟁 (77년 4월까지 계속)
2. 9 문교부 교수 재임용에서 46명 탈락
2. 25 학원에서 반정부 풍자시 배부 사건
2. 29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 (이재문·신향식·김병권)
3. 1 명동성당 3·1절 기념 미사에서 '민주구국선언' 발표 (명동사건)
3. 27 한신대생 3명 유인물 배포 후 시위 시도
4. 1 손윤규(진정 제52호, 기각),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었음. 교도소 전향공작전담반 직원들은 폭력을 동원하여 전향강요를 하였고, 손윤규는 단식으로 항거하였으나, 3차례의 강제급식을 당한 후 사망하였다.
4. 3 동일방직 노사분규 발생
4. 4·19 기념식에 전남대 학생 배후 조정 혐의 (윤한봉 사건)
5. 연대 민청학련 석방자 5-6명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
6. 계명대생 4명 유인물 관련으로 구속 / 세종대생 3명 유인물 배포 후 시위 시도
8. 10 제2 명동사건
10. 4 박동선 로비 사건, 미국에서 정치문제화
11. 14 심오석(진정 제61호, 진상규명불능), 등교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학생들이 잡혀가고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
12. 8 서울대 법대생 교내시위

* 1977년

1. 미풍 노조수호 투쟁 (12월까지)
2. 2 방림방적 노사분규 발생
3. 9 카터 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점진철수 발표
3. 23 윤보선·정구영·지학순 등 10인, '민주구국헌장' 발표
3. 28 서울대생 500여 명, '민주구국선언' 낭독 후 유신헌법 철폐 요구 시위
4. 12 서울대 시위 반정부 유인물 배포 사건 (4명 구속)
4. 20 국제방직 노조결성 투쟁
4. 21 고대생 유인물 배포로 5명 구속
7. 혁신피혁공업사 노동자 민종진의 가스 질식사에 대한 항의투쟁
8. 16 '구속자가족협의회' 50여 명 단식농성
10. 7 서울대생 1,500여 명 반정부 시위, 8명 구속
10. 12 연대 '구국선언서' 배포
10. 24 동아투위 '77년 자유언론선언' 발표
10. 25 연대생 2천여 명 반정부 가두 시위, 7명 처벌
11. 4 김제강(진정 제71호, 기각),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사망
11. 11 서울대 '민주구국선언' 유인물 배포, 3천여 명 반정부 시위

11. 18 서강대 2천여 명 반정부 시위
12. 2 해직교수들 '민주교육선언' 발표
12. 29 '한국인권운동협의회' 발족
12. 30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민주·민족언론선언' 발표

* 1978년

1. 12 재야인사 7명 시국간담회 후 '민주국민에게 고함' 발표
2. 동일방직 노조수호 투쟁 재발 (4월까지)
2. 21 동일방직 노동자 오물세례 사건
2. 24 재야인사 66명 '3·1 민주구국선언' 발표
3. 17 동아투위, 동일방직사건 관련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조하는 단식농성 돌입
3. 26 여성노동자 6명 부활절예배 기습시위
4.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복직투쟁 (80년 5월까지)
4. 13 해직교수들 '해직교수협의회' 발족
4. 19 부산대생들 유인물 배포 후 시위 기도
4. 24 전남 함평 고구마 부정수매 사건 항의 농민대회
5. 8 서울대생 1,500여 명 유신헌법철폐 요구 교내시위
5. 12 '민주청년인권협의회' 결성
5. 16 '민주회복구속동지회' 결성
5. 18 각계 인사 66명 '오늘 우리의 주장' 통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무효 선언
6. 11 이승룡(진정 제75호, 진상규명 불능), 경북대 교정 아카시아 숲 속에서 변사체로 발견
6. 12 서울대생 5천여 명 '학원민주선언' 발표하고 대규모 시위
6. 26 서울대생 1천여 명 대통령선거 반대 광화문 심야시위
7. 2 전남대생 2천여 명 광주 시내에서 시위
7. 4 정법영(진정 제28호, 인정), 약물에 중독된 상태로 발견, 입원중 7월 8일 사망
7. 5 각계인사 300여 명, '민주주의국민연합' 결성
7. 6 통일주체국민회의, 박정희를 9대 대통령으로 선출
7. 6 전주의 신부 30여 명 가톨릭센타 옥상에서 시위 (경찰이 사제관에 난입·폭행함으로써 사태 확산)
8. 16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주대회 사건 발생 (청년들의 시가행진을 경찰이 진압함으로써 사태 확산)
9. 13 서울대생 2천여 명 가두시위, 10명 구속
9. 14 고려대생 4천여 명 반정부 시위
10. 6 숙대생 500여 명 교내시위
10. 17 윤보선·함석헌·문익환 등 재야인사 402명, '10·17 민주국민선언' 발표
10. 17 광화문 군중시위 기도 관련 40여 명 검거
11. 2 경북대생 1,500여 명 선언문 낭독하고 교내시위
11. 7 경북대생 6천여 명 대구 시내에서 격렬한 가두시위

12. 12 10대 국회의원 총선거 (신민당의 득표율이 공화당을 앞지름)
12. 28 민주주의국민연합과 한국인권운동협의회, '제9대 대통령 취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

*** 1979년**

3. 1 윤보선·함석헌·김대중,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결성
4. 민주구국학생연맹 사건 5명 구속 (남민전 관련 2월 결성)
4. 19 중앙정보부,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발표 (이우재 등 7명 구속)
5. 30 신민당 총재로 김영삼 선출
6. 25 고려대생 3명 카터 방한 반대 유인물 배포 후 농성
6. 27 재야인사 12명 카터 방한 반대 시위
7. 5 카톨릭 농민회 회원 오원춘 양심선언 (7. 25에 한번 더 했음)
8. 11 YH무역 신민당 농성 노동자 강제 해산, 김경숙 노동자 사망
8. 13 신민당 총재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8. 1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YH사태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이후 기독교 각 교단의 성명서 이어짐)
8. 20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를 위한 기도회' 개최. 1만여 명 참가. 이후 일부는 가두시위
9. 3 강원대생 800여 명 시위
9. 4 경북대·계명대·영남대생들 '경북학생협의회' 구성하고 시위
9. 8 서울민사지법, 신민당 총재단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9. 11 서울대 1,500여 명 시위, '민족·민주선언'·'학원민주화선언'·'경제시국선언' 발표, 5명 구속 70명 연행
9. 12 김대중 외부접촉 일체 금지
9. 20 서울대생 1천여 명 교내 시위 (경찰과 투석전)
9. 21 정운갑 신민당 총재 대행 등록신청서 중앙선관위에 제출
10. 4 국회본회의 김영삼 총재 제명 결의
10. 9 남민전 사건 발표
10. 13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과 통일당 의원 3명 전원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
10. 16 이대생 1천여 명 교내시위
10. 16 부산대생 5천여 명 유신철폐·독재정권퇴진·학원탄압 중지 요구 시위 (부마항쟁 시작)
10. 18 부산시민 2천여 명 가두시위, 마산 대학생 가두시위, 부산 일대에 계엄령 선포
10. 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저격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
10. 27 전국에 비상계엄선포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11. 22 서울대 '학원민주화 성명서' 발표, (이후 각 학교에서 학원민주화 선언)
12. 5 전북대 '민주학생선언' 사건
12. 12 국군보안사령부,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12. 21 최규하, 10대 대통령에 취임

*** 1980년**

3. 6 김대중 신민당 입당,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후보문제를 논의
4. 14 전두환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
4. 21 사북광업소 광부 700여 명, 어용노조에 반발하여 광산촌을 점거·농성 중 경찰과 충돌하여 유혈사태 발생 (사북사태)
5. 15 서울 30개 대학 10만여 명, 서울역 광장에 모여 계엄해제 요구 야간 시위
5. 17 계엄사, 비상계엄 전국 확대, 김대중·문익환 등을 소요조종 혐의로 연행
5. 18-27 광주민중항쟁 전개
5. 23 위컴 한미연합군사령관, 연합사 소속 병력 광주시위 진압동원에 동의
7. 11 변형만(진정 제54호, 인정), 김용성(진정 제58호, 인정), 사회안전법에 의하여 청주보호감호소에 수용됨. 감호소의 서적제한조치로 피보안감호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이에 동참하였다. 이들에게 교도관들은 강제급식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7. 19 임기윤(진정 제47호, 인정), 보안사 부산분실에 출두한 후, 7월 21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6일 사망
8. 4(-81.1.24)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에 따라 삼청교육대 실시 3,252명 군사재판회부, 39,742명 삼청교육 실시, 54명 사망
8. 16 최규하 대통령 사임
8. 20 한국노총의 노동조합 정화조치로 191명의 민주노조간부들 강제정화당함
8. 27 전두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에 당선
10. 13 국보위, 사회악 사범 4만 6000여 명 검거, 2000여명 재판회부하고 나머지 군부대에서 순화교육 실시했다고 발표.
10. 18 고려대 문과대생 200여명, 교내 시위, 즉각 휴업령.
10. 22 5공화국 헌법 국민투표에서 확정
10. 27 국가보위입법회의 발족, 의장 이호./계엄군, 전국사찰에 난입하여 승려 등 불교도 153명을 불법연행
11. 13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김대중에 사형 선고.
12. 7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청계피복노조 지부장 조합간부 7명 연행.
12. 22 정부,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고 기능 일부를 조정.
12. 26 입법회의 경제 제2위원회, 노동관계법을 개정, 산업별 노조체제를 기업별로 바꾸고 제3자 개입 금지, 노조설립 요건 강화.
12. 30 입법회의,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흡수.

*** 1981년**

1. 15 민주정의당 창당.
1. 17 민주한국당 창당.
1. 20 민주사회당 창당.
1. 22 청계피복노조 폐쇄.
1. 23 한국국민당과 민권당 창당./ 대법원,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관련 피고인 12명의 상

고 기각, 김대중 사형 등 형량 확정. 정부, 김대중의 형량을 무기로 감형.

1. 24 정부, 456일만에 비상계엄 전면 해제.

2. 10 청계피복노조원들, 서울시의 노조해산 명령에 불복 농성, 11명 구속됨.

2. 25 전두환 후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

3. 3 전두환, 제12대 대통령에 취임. 제5공화국 출범./ 정부, 부마 광주항쟁 및 민청학련 사건과 10.26사태 관련자 5221명 사면 복권 감형.

3. 5 서울 신흥교통 안내양 95명, 부당처우개선 · 체불임금청산 요구 농성.

3. 19 서울대생 300여명, '반파쇼민주화투쟁선언'이라는 유인물 살포하며 교내시위.

3. 31 국가보위입법회의 154일간의 활동 종결.

4. 3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83명 전원에 감형 및 사면 단행.

5. 27 서울대생 김태훈, 전두환 물러가라 는 구호를 외친 뒤 투신 자결

6. 20 전정배(직권 제85호, 인정), 육군 O사단에서 수용중 삼청교육 감호생 집단시위사건 과정에서 경계병들의 발포로 사망. 1980년 8월 4일 삼청교육대상자로 연행되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은 후 사회보호법에 의거 감호처분을 받고 수감중이었다.

7. 23 이태복 등 25명, 전국민주학생연맹 · 전국민주노동연맹사건으로 구속됨.

7. 31 국가안전기획부, 전남 진도를 중심으로 24년간 활동해온 박영준(60세) 등 간첩 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

8. 5 정부, 광복절을 기해 광주항쟁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 등 1061명에 대해 특별사면, 형집행정지로 가석방.

9. 1 부산대생 최종철, 부마항쟁에 참가하여 쿠데타 후 구속된 뒤 후유증으로 사망

10. 13 국군보안사령부, 학원가에 침투한 재일교포 유학생 김태홍(연대 경제과 4년)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11. 11 국군보안사령부, 대학가에서 통혁당 결성을 기도한 이주광 등 재일동표 2세 2명을 검거했다고 발표.

11. 14 신문협 · 방송협, 언론기관 통폐합 결정. 동아방송 · 동양방송은 KBS로, [신아일보]는 [경향신문]으로, [서울경제]는 [한국일보]로, 지방지는 1도 1사, 합동통신 · 동양통신은 통합, 중앙지의 지방 주재 기자 철수.

11. 22 이재문(직권 제83호, 기각), 남민전 사건으로 검거되어 2개월여 동안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받았고, 1980년 12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음. 그 후 '위유문부협착증' 진단을 받고 형집행 대기 수감 중 서울구치소에서 사망하였다.

12. 26 입법회의, 언론기본법 의결(12. 31 공포).

* 1982년

1. 2 이진래(진정 제12호, 기각), 카투사. 군부대 향나무에 자신의 군화 끈으로 목이 매어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1. 22 서울형사지법, '학림사건'의 이태복(30세)에게 무기징역 선고.

2. 8 최봉대(진정 제80호, 기각),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골목길에서 실신 상태로 발견. 서정파출소에서 보호조치를 취하던 중, 최봉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병원에 옮겨 뇌수술을 받게 하였으나 곧 사망하였다.

2. 12 국가안전기획부, 경기도 강화군 이법도를 거점으로 20년간 간첩활동해온 황용윤 등

을 구속했다고 발표.

3. 13 신영수(진정 제8호, 기각), 잠실 근처 삼성교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

3. 18 고신대생 문부식 등, 반미 유인물 뿌리고 부산미문화원에 방화(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4. 2 정부, 전국 89개 대학의 지하서클 112개 정밀조사.

4. 3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된 김현장 검거됨.

4. 8 경찰, 천주교 원주교구 교육원장 최기식 신부를 김현장 은닉혐의로 구속.

4. 13 국가안전기획부, 서울 안동을 거점으로 25년간 간첩활동해온 안승윤(51세)과 포항에서 15년간 간첩활동해온 김준보(40세) 등 3개 간첩망 10명을 구속했다고 발표.

4. 17 노진수(진정 제60호, 진상규명불능), 서울법대 재학생. 서울대 인근 한림독서실에서 실종되었다.

4. 22 강원대생 200여명, 성조기 태우며 반미시위.

4. 26 경남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우범곤 순경이 술에 만취해 5개 마을주민에게 총기를 난사, 62명을 죽이고 자폭.

5. 17 박헌강(진정 제15호, 기각), 새벽 골목길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후송되었다가 20일 사망하였다.

7. 23 정성희(진정 제62호, 인정), 초소에서 변사체로 발견. 연세대 재학중 1981년 11월 25일 교내 시위 도중 연행되었다가 28일 강제징집되었다. 1982년 1월 14일 자대배치되었으며, 이후 보안사의 녹화사업 대상자로 조사를 받았다.

8. 10 부산지법,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선고공판에서 문부식 · 김현장 피고에게 사형 선고.

8. 22 문영수(진정 제33호, 기각), 경찰에서 조사 받던 중 갑자기 혼수상태가 되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곧 사망하였다. 경찰은 문영수를 행려병자로 처리하였고 사체는 전남대학교 해부실습에 사용되었다. 가족은 이 사실을 1987에야 알게 되었다.

9. 10 국가안전기획부, 서울과 충북을 거점으로 25년간 활동해온 송지협(59세) 등 고정간첩단 1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

10. 1 정부, 원풍모방 노조탄압, 항의농성중인 650명 폭력적으로 강제해산.

10. 7 원풍모방노조, 노동조합 파괴에 대항하는 항의기도회 무산되자 가두시위.

10. 12 광주항쟁과 관련 구속 기소된 박관현 전 전남대학생회장, 광주교도소에서 단식 끝에 사망.

10. 24 정부, 광주사태 및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 관련자를 포함한 1206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

12. 8 전북도경, 학원 내 사회주의 서클 활동 혐의로 군산의 고교교사 8명 등 모두 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오송회사건)

* 1983년

3. 8 대법원,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피고 김현장 · 문부식에게 사형 확정(15일에 무기로 감형)

3. 11 국가안전기획부, 미군부대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2개 간첩망 4명을 검거, 김장호(42세) · 차풍길(39세) 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

5. 4 이윤성(진정 제39호, 인정), 보안부대 테니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 1982년 11월 3일 대학연합시위 과정에서 연행된 후 11월 6일 강제징집되었다(성균관대 재학중). '특수학적변동자'로 감시를 받았으며, 의사사 제대를 10여 일 앞두고 '녹화사업' 조사를 받기 위해 보안부대에 연행되었다.

5. 18 김영삼 전신민당 총재, 민주화와 정치활동 피규제자 해금 등 주장하며 자택에서 단식(~6.9)

5. 19 경찰, 단식농성중인 원풍모방 구속자가족 및 노조간부 전원 강제연행.

5. 26 국가안전기획부, 김성규(43세) · 김병규(52세) 등 2개 간첩망 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

6. 18 김두황(진정 제5호, 진상규명 불능), 매복근무를 나간 후 총상을 입고 사망. 고려대 재학중 1983년 3월 15일 1학기 시위 모의사건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18일 강제징집되었다. 특수학적변동자로 감시를 받고 있었다.

7. 2 한영현(진정 제49호, 인정), 벙커 내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 1983년 2월 한양대 재학중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등 이후 몇 차례 조사를 받다가, 4월 2일 강제징집되었다. 4월부터 보안부대의 녹화사업 조사를 받았다.

7. 13 국가안전기획부, 김광호(30세) · 김동주(28세) 등 3개 간첩망 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

8. 12 정부, 광복절을 맞이하여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 10명, '김대중사건' 관련자 318명 등 공안사범 695명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

8. 14 최온순(진정 제55호, 진상규명 불능), 13일 야간 경계근무에 투입된 후 14일 새벽 총상을 입고 사망. 동국대 재학중 3월 시위예비 등의 혐의로 21일경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29일 강제징집되었다. 6주간의 신병훈련을 받은 후 5월 17일 자대에 전입되어 특수학적변동자로 감시를 받았다.

8. 23 야학교사와 관련대학생 · 노동자 500여명, 경찰에 강제연행되어 조사받음(야학연합회사건)

9. 30 민주화운동청년연맹(민청련) 창립.

11. 16 서울대생 황정하, 도서관 6층 난간에서 시위 중 추락하여 사망

12. 4 대간첩대책본부, 부산 다대포해안 침투 무장간첩 2명을 생포하고 도주선박은 격침시켰다고 발표.

12. 5 정부 유화조치 발표

12. 11. 한희철(진정 제53호, 인정),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사망. 서울대 재학중 1982년 입대하였다. 1983년 10월 28일 휴가를 나왔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던 동료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도와주다 보안사에 포착되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보안사 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10일 부대에 복귀하였다.

12. 15 정은복(진정 제70호, 진상규명불능). 1983년 안기부에 연행되어 간첩활동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으나 지속적이 안기부의 감시를 받았다. 그러던 중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12. 19 국가안전기획부, 유재선(48세), 정영(42세), 김상원(23세) 등 3개 간첩망 12명을 검거했다고 발표.

12. 20 해직교수협의회 발족

12. 21 문교부, 1980년 5.17 이후 학원사태와 관련해 제적된 전국 65개 대학 1363명에게 1984학년도부터 복교를 허용한다고 발표.

12. 23 정부, 학원소요와 관련된 학생사범 131명을 포함한 공안사범 172명에게 특별사면, 복원, 형집행정지 조치.

* 1984년

1. 11 치안본부, 통일방안에 대한 강연내용을 문제삼아 강만길, 이영희, 조승혁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2. 23 국가안전기획부, 2개 간첩망 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

2. 25 정치활동 피규제자 301명 중 202명을 추가해금(2차해금)

3. 2 정부, 3.1절 특사로 학원사태 관련 학생 159명 등 1176명을 형집행정지 또는 특별가석방.

3. 9 서울대 등 6개대학, 제적학생총회를 열고 각 대학별로 학원자율화추진위 구성.

3. 10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창립대회 개최.

3. 13 야당의원들, 강제징집 후 숨진 대학생 6명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15일, 국방부에서 5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다고 답변).

3. 24 80년 해직언론협의회 결성.

3. 25 [민주화의 길](민청련기관지) 창간.

4. 2 허원근(진정 제32호, 기각), 부산수산대생. 중대장 전령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의 폐유튜고 뒤에서 rkta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

4. 4 서울시내 대학생 1000여명, 강제징집 후 숨진 대학생 추도식을 갖고 시위.

4. 13 전국 55개 대학, 학원민주화 요구하며 시위 농성.

4. 14 청계피복노동조합 재결성.

4. 17 고려대생 1500여명, 강제징집철폐 등을 외치며 가두 진출.

5. 4 고려대에서 6개대생 5000여명, 강제징집 철폐를 주장하며 반정부 시위.

5. 14 이창돈(진정 제10호, 진상규명불능), 수송부 운전병으로 군생활을 하던 중, 소속대행정반에서 총기에 의해 사망하였다.

5. 17 서울 17개 대학 등 전국 26개 대학생, 광주민주화운동 4주기 관련 시위.

5. 18 민주화추진협의회 발족, 공동의장 김영삼 · 공동의장 대행 김상현 · 고문 김대중.

5. 25 대구에서 택시운전사 400여명, 사납금 인하 등 요구하며 가두시위.

6. 4 부산 택시운전사 1000여명, 사납금 인하요구 집단시위.

6. 15 유치송 민한당총재,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

6. 14 문교부, 해직교수의 원래 소속대학 복직을 허용.

6. 29 청년, 노동자, 농민, 재야, 종교운동 등 각 부문운동 결집체로 민중민주운동협의회 발족, '민주민중운동선언' 발표.

8. 24 목동주민 1000여명, 철거에 항의 양화교 점거 농성 시위.

9. 28 서울대생 350명, 학원프락치사건과 관련 민한당사에서 학원사찰 중지 요구 농성.

10. 12 청계피복노조 소속 노동자와 대학생 2000여명, 청계노조합법성 쟁취대회가 저지당하자 가두시위.

10. 13 국군보안사령부, 재일교포유학생 윤정헌(고대 의학과 3년) 등 6개 간첩망 6명을 구속했다고 발표.

10. 13. 박영두(직권 제81호, 인정), 청소보호감호소에서 사망. 1980년 8월 고향에서 계엄군에게 연행되어 삼청교육과 근로봉사를 마친 후 보호감호 2년을 받고, 보호감호 중 1981년 10월 1일 발생한 '난동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983년 3월 청소보호감호소로 이송되었다.

10. 16 민주통일국민회의 결성(의장 문익환 목사)

10. 20 14개대 여학생회연합, 이대에서 여학생 추행사건 규탄대회 개최.

10. 24 서울대생, 학원프락치사건과 관련 중간고사 집단 거부/ 경찰, 학교측의 요구로 전경 6400여 명 서울대 투입.

11. 2 임용준(진정 제2호, 진상규명불능), 군생활 중 M16소총 실탄 1발이 목 앞 중앙부분에서 정수리부분으로 관통 당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발견됨.

11. 3 42개 대학생, 연세대에서 반독재 민주화투쟁 전국학생연합 결성.

11. 13 서울대생, 구로공단에서 노동 3권 보장 요구 시위.

11. 14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학생 264명, 민정당사 점거농성.

11. 30 정치활동 피규제자 99명 중 84명 해제(3차 해금) / 민경교통 택시운전사 박종만, 노조탄압에 항의 분신자살.

12. 20 해금자가 주축이 된 신한민주당 창당발기인 대회.

12. 21 대학생 200여명, 전국대학연합 선거대책위원회 결성.

* 1985년

1. 16 전남대생 기혁, 독재정권의 교육정책 반대 투쟁 중 자결

2. 8 김대중 귀국

2. 12 총선, 민정당 사실상 패배

2. 27 신민당 이민우 총재, 공식기자 회견을 갖고 양심수와 구속학생 석방, 정치규제법 폐기 등 5개항 정부에 촉구.

3. 2 석탄공사 산하 장성광업소 광산노동자와 가족 1000여명, 노조지부장 직선과 광업소장의 사퇴 등 요구 농성.

3. 6 정부, 정치규제 전면 해금조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미해금자 14명.

3. 10 노동자 · 학생 등 1000여명,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주최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후 시위.

3. 14 정부, 학도호국단 폐지.

3. 18 김대중,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직에 정식 취임.

3. 20 국가안전기획부, 서울과 안동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김철(72세)등 4개 간첩망 1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 / 신정, 목동 주민과 대학생 등 600여명, 철거 중지 요구하며 시위 철야농성(목동시위사태)

4. 2 장이기, 예비군훈련 중 군사독재정권과 광주학살에 대해 연설 뒤 고문당해 사망.

4. 12 노동자, 학생 2000여명, 신당동 일대에서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노동3권 보장 등 요구 시위.

4. 16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 2100여명, 임금인상 요구 파업.

4. 17 전국 23개대생 1200여명, 고려대에서 전국학생총연합회 결성

5. 1 대학생, 노동자 2800여명, 영등포시장 로터리에서 노동운동 탄압 중지 요구 시위.

5. 4 문공부, 불온, 불법간행물과 지하유인물 298종 4517부를 압수했다고 발표. / 대우자동차 파업, 부평경찰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 농성사건 주동자 홍영균(28세) 등 5명 구속.

5. 17 전국 80개대학 대학생 4만여 명, 학교별로 광주사태 진상규명 요구시위.

5. 18 신민당, '광주사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특별성명 발표.

5. 23 서울대·연세대 등 5개대생 73명, 서울미문화원을 점거하고 광주사태에 관한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26일 자진해산)

5. 28 서울시경, 서울미문화원 점거사건 주동자인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운경 등 25명 구속.

6. 7 전국학생총연합회, 서울대에서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사태 등에 대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6. 22 대우어패럴 노동자 300여명, 구속자 석방, 노조탄압 중지 요구 농성.

6. 24 구로공단내 대우어패럴, 가리봉전자, 효성물산 및 양평동의 선일섬유 등 4개 업체 노동자 1200여명, 구속자 석방, 노조탄압중지, 노동법개정 등 요구하며 연대농성(구로동맹파업), 50년대 이후 최초의

6. 18 월간 [말] 창간(28, 경찰 창간호 압수)

6. 28 우수열(진정 제11호, 기각), 집을 나간 후 30일 오전 용산역 부근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

7. 18 정부, 삼민투쟁위원회와 관련 김태용 등 56명 구속했다고 발표

7. 20 정부, 유인물 [깃발] 사건 발표

8. 7 민주화추진협의회, 학원안정법저지대책위원회 구성.

8. 15 건설노동자 홍기일,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8·15를 맞이하는 뜨거움의 무등산이여! 라는 전단살포후 분신 자결

8. 17 학원안정법 파동

9. 5 서울시내 6개대학 1000여명, 고대에서 85년도 2학기 민중민주운동선언대회 열고 연합시위.

9. 9 안기부, 김성만, 양동화 등 '구미유학생학원침투간첩단' 검거 발표.

9. 10 치안본부, '민주화청년운동연합' 전의장 김근태 구속.

9. 14 경찰, 고려대 국민대토론회 방문과 관련 신민당 박찬종, 조순형 의원 등 13명을 집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9. 17 경원대생 송광영, 학원안정법 반대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며 분신(10. 21 사망)

9. 25 농축산물 수입개방반대 시위

10. 4 김근태(38세) 변호인단, 김씨의 신체에 남아 있는 고문흔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10. 12 우종원(진정 제24호, 진상규명 불능), 서울대 재학중 1985년 8월부터 수배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던 중 충북 영동군 황간면 경부선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

10. 29 서울지검,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과 관련 문용식 등 26명을 구속했다고 발표.

11. 1 국군보안사령부, 나종인 등 5개 간첩망 16명을 검거 발표.

11. 4 고대생 30여명,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시위 농성. 서울대 등 서울시내 7개대생 14명, 주한미상공회의소 점거 농성.

11. 18 전국학생총연합회 소속 서울시내 14개 대학생 185명,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기습 점거(20일 191명 구속)
11. 21 서울시내 10개 대학생 2000여명, 서울대에서 독재종식과 제5공화국 헌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토론회 개최.
12. 2 전남대생 등 9명, 광주미문화원을 점거하고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 중지 등 요구 농성.
12. 4 민주화추진협의회, 개헌추진운동의 일환으로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
12. 9 서울시, [창작과비평사] 등록 취소.

* 1986년

1. 21 경찰 민통련 사무실 수색.
2. 21 신민당과 민추협, 1000만 개헌서명운동 시작.
3. 10 아산군 영농후계자 회장 오한섭, 무책임한 영농정책에 분개 음독, (3.13 사망)
3. 17 신흥정밀 노동자 박영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며 분신 자결(신흥정밀에 구사대 출동)
3. 24 연세대에서 진행된 학기중 전방입소 거부에 관한 범연세인 실천대회 를 시작으로 전방입소 반대투쟁
4. 2 한신대 교수 42명, 개헌촉구 시국성명서 발표, 이후 각계로 파급.
4. 13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개헌서명운동 돌입.
4. 28 서울대생 김세진·이재호, 전방부대 입소거부 시위 도중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치며 분신, (김세진 5.5 사망, 이재호 5.26 사망)
4. 29 전국 20개 대학생 1000여명, 연세대에서 전국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 학생연합(전민학련) 결성.
4. 30 삼환택시 노동자 변형진,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 분신, 5월 1일 사망
5. 3 학생 노동자 등 5000여명, 신민당 개헌추진위 인천지부 결성대회에서 경찰과 충돌(5.3사태)
5. 5 경찰, 자민투, 민민투를 용공좌익단체로 규정, 주모자 27명 수배.
5. 10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산하 교사 546명, '교육민주화 선언' 발표.
5. 15 대학교수와 전현직교사 120여명, 민주교육실천협의회 발족.
5. 16 김상원(진정 제29호, 기각), 1986년 3월 10일 밤에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립 영등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화농성 뇌막염으로 사망하였다.
5. 19 고려대 전방입소 거부.
5. 20 서울대생 이동수, 문익환 목사의 강연회 도중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등을 외치며 분신자살.
5. 21 서울대 고려대생 21명, 부산 미문화원 점거.
5. 21 서울대생 박혜정, 한강에 투신 자결
5. 26 노동자 김상원,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뒤 사망
6. 2 전국 23개대 교수 265명, 정치 경제 사회 대학 등 4개 항목에 대해 시국선언문 발표.

6. 5 이경환, 청량리 맘모스 호텔 옥상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투신 자결
6. 6 강상철, 목포사회운동청년연합 활동 중 직선제 개헌단행을 촉구하며 분신, 6월 26일 사망
6. 11 신호수(진정 제3호, 진상규명 불능), 연안가스 노동자, 서울 서부서 대공과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6월 19일 여수 인근 야산 바위굴에서 변사체로 발견.
6. 18 김성수(진정 제25호, 진상규명 불능), 서울대 1학년 재학중, 18일 아침에 실종된 후 6월 21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몸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매단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7. 2 부천서 성고문사건 알려짐,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 30여명 문귀동 형사의 성고문에 항의농성.
7. 16 검찰, 부천서 성고문과 관련 '성적 모욕'은 없었다고 발표. 문귀동 경장 파면.
7. 19 경찰, '성고문 용공조작 범국민폭로대회'를 저지하기 위해 명동성당을 완전차단하고 김대중 등을 자택 연금.
7. 29 이재근(진정 제68호, 기각),성균관대생으로 보안부대서 군생활을 하였음. 7월경 실종된 후, 한강에서 잠수부에 의해 발견되었다.
10. 14 유성환 의원, 국시발언
10. 24 검찰, ML당 사건 발표, 김선태 등 27명 검거.
10. 27 검찰, 5.3 인천사태 배후주동으로 수배된 이부영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10. 28 26개대 2000여명,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발족식 후 시위중 경찰에 밀려 철야농성.
10. 31 경찰, 전경 8000여명을 투입, 건대 농성학생 1219명을 전원 연행(총연행자 1525명)
11. 5 경성대생 진성일, 건대 농성사건 해명, 독재 타도, 미제 축출 요구 분신 자결
11. 7 서노련, 인노련 해산명령.
11. 10 신민당, 민통련 해산명령에 항의 국회 보이콧.
11. 12 경찰, 민통련 사무실 폐쇄. 경찰 반제동맹당 사건 발표.
11. 26 평화의 댐 건설 발표
11. 29 서울개헌대회, 경찰봉쇄로 무산, 산발적 가두시위로 2200명 연행.
12. 4 인천지법 형사합의 2부, 부천에서 성고문사건의 권인숙에게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를 이유로 1년 6개월 선고.
12. 15 치안본부, [말] 특집호 보도지침기사와 관련, 민언협의 신홍범(45세) 구속.

* 1987년

1. 14 서울대생 박종철,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1. 27 [말] 특집호의 보도지침사건과 관련, 김주언(32세, 한국일보기자), 김태홍(44세, 민언협 사무국장), 신홍범(45세, 민언협실행위원) 등 3명이 구속기소됨.
2. 7 2·7 고문살인 규탄 투쟁
2. 19 문교부, 대학생 전방입소를 선택과목으로 바꾸어 3월부터 시행키로 결정.
2. 20 김용권(진정 제63호, 진상규명불능), 카투사 근무. 내무반 이층침대 난간에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 20 서울교대생 박선영, 비민주적 학사운영과 매판세력의 지배에 항의 자결

2. 26 전국농민협회 결성, 전국 15개지역 자주적 농민회 참가

3. 1 노철승(진정 제44호, 기각).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머리에 소총 실탄 2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3. 3 이승삼(진정 제45호, 진상규명불능), 부대 지휘관의 지시 없이 부당하게 4시간 이상 대공초소 근무를 한 후, 본부중대 중대장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3. 6 하남공단 신흥금속 노동자 표정두, 슬츠 방한을 앞두고 내각제 개헌반대, 장기집권 음모분쇄, 광주사태 책임지라 는 구호를 외치며 미대사관 앞에서 분신, 3월 8일 사망

3. 19 박필호(진정 제40호, 기각), 부산대생. 소속부대 화장실 천장의 보에 묶여 있는 판초우의 끈에 목이 매달린 변사체로 발견.

3. 27 부산대생 장재완, 방위병 근무 중 중요문건이 보안대에 넘겨지자 조직보위 위해 자결

4. 5 양김씨, 통일민주당 창당

4. 8 택시운전기사 완전월급제, 취업카드철폐, 최저생계비 보장 요구 가두차량시위

4. 13 전두환, 4·13호헌조치 선언

4. 14 김수환 추기경, 4.13조치를 비난, 이후 각계에서 시국 성명이 계속됨.

4. 24 가칭 통일민주당 관악지구당 창당방해사건 발생(용팔이 사건)

4. 29 문학인 193명 개헌촉구 성명.

5. 1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사건 발표.

5. 11 박상구(진정 제43호, 기각), 외박 후 늦게 복귀했다는 이유로 일직사관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다. 그날 박상구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무기고 초병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옮겼으나 사망하였다.

5. 17 노동자 황보영국, 독재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고 외치며 분신, 5월 25일 사망

5. 18 김승훈 신부, 광주민중항쟁 7주년 추모 미사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조작폭

5. 27 민주당, 신구교, 재야단체 등 발기인 2191명,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4.13조치 철회 및 직선제개헌 공동쟁취 선언.

6. 8 정경식(진정 제6호, 진상규명 불능),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노조활동 관련한 폭행사건를 합의하기 위해 나갔다가 실종, 9개월 후인 88년 3월 창원 불모산에서 유골로 발견.

6. 9 이한열, 6·10총궐기를 위한 결의대회 중 직격최루탄에 피습, (7. 5 사망)

6. 10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후보 지명대회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 , 6·10 민중항쟁

6. 15 이이동(진정 제4호, 기각), 전남대생. 소속 부대 뒷산 3부 능선에서 우측두부에서 좌측두부로 1발이 관통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사망하였다.

6. 18 전국에서 최루탄 추방대회 열려 태광고무 노동자 이태춘, 대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추락 사고당해 6월 24일 사망

6. 19 전두환, 고위 시국대책회의 열어 현 상황을 중대 국면으로규정, 비상조치 구체적 검토

6. 26 전국 37개 도시에서 평화대행진 시위, 경찰 3467명 연행.

6. 29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 직선제개헌 김대중 사면 복권 등 8개항의 시국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6.29선언)

6. 25 외대생 이재용, 경찰의 학내침탈 소식을 듣고 피하다 사고로 사망

6. 26 국민평화대행진 , 국민 100만 참여

6. 29 노태우, 6·29 선언 발표 7월~9월 노동자 대투쟁

7. 3 울산 현대엔진노동조합결성

7. 12 채광석, 시인으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사무국장 활동 중 사고로 사망

7. 30 김소진(진정 제67호, 기각). 유격훈련장에서 훈련 중 실종. 1999년 8월 22일 유격훈련장 부근 감악산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다.

7. 31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국제상사, 태광산업 등에서 노사분규 진행. 전국으로 확산.

8. 8 옥포대우조선 파업 농성.

8. 10 옥포, 창원, 인천 등 전국에서 파업

8. 14 현대중공업 어용노조를 거부하며 민주집행부선출을 위한 선거

8. 17 울산현대그룹노동자 1만 5000여명, 회사측의 휴업조치에 항의 연합가두시위.

8. 19 전국 95개대 3500여명, 충남대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8. 22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평화시위 중 직격 최루탄에 맞아 사망./ 서울시내버스 총파업.

9. 1 완전월급제 실시 협상 결렬로 서울택시 파업, 총 1만 6700대 중 1만 900대 참가.

9. 2 조흥택시 노동자 이석구, 노조 활동을 하다 회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의 분신,(9.19 사망)

9. 3 울산현대중공업 대규모 시위로 울산시청 화재, 노동자 채태창 사망.

9. 8 최우혁(진정 제64호, 진상규명불능), 서울대생. 군생활 중, 소각장에서 몸에 불이 붙은 채로 위병근무자들에게 발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10. 16 고려화학 노동조합 사무장 김수배, 회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의 분신 자결

11. 3 노동자 김성애, 산재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산재중앙병원에서 투신 자결

11. 26 박태조(진정 제73호, 인정),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1980년 7월 1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내란실행죄 등으로 구속된 후 4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중 1981년 4월 3일 특별사면으로 출소.

11. 29 KAL기 폭파사건

12. 4 정연관(진정 제41호, 기각), 내무반 침상에서 병장에게 구타를 당하다 쓰러져 병원에 옮겼으나 사망하였다.

12. 5 노동자 박응수, 후보단일화하라 고 절규하며 대전역 앞에서 분신 자결

12. 10 목포대생 박태영 거국중립내각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 자결

12. 16 대통령선거, 노태우 당선, 공정선거감시단 소속 대학생 등 1000여명, 부재자투표함 밀반출을 적발하여 구로구청사 봉쇄하고 농성(구로구청 사건)

12. 16 심재환(진정 제66호, 기각), 대학 졸업 후 인천 '삼화실업' 노동조합 임원으로 활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12. 18 경찰, 부재자투표함 사건 관련 구로구청 점거시위를 3일째에 강제진압, 시민 등 915명 연행.

12. 23 학생, 시민 1000여명, 광주 충장로 등지에서 선고무효 주장하며 시위.
12. 27 서대협 주최로 부정선거 무효화 및 독재퇴진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민, 학생 2000여명, 명동성당 밖으로 진출 시위.

* 1988년

1. 6 우성택시 노동자 이대건, 단체협약 위반에 항의하여 분신, 1월 8일 사망.
1. 7 정인택(진정 제48호, 기각), 자신의 아파트 현관 화단에서 뇌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투병하다가 1996년 6월 6일 사망.
1. 12 黃迪駿 박사, 경찰 수뇌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으며 쇼크사로 해달라는 강요도 있었다고 증언.
3. 1 인천 경기교통 노조위원장 김장수, 부당해고 반대 요구하며 분신, 3월 9일 사망
3. 10 오범근(진정 제34호, 인정), 대원전기 노동자, 구사대 폭력을 항의하기 위해 사장회의실에 올라갔다가 음독 사망.
3. 21 국가안전기획부, '반미청년회'와 관련 장원섭 등 7명 구속 발표.
3. 25 농민운동가 김길호, 87년 부정선거 규탄투쟁 중 경찰에게 집단구타 당해 후유증으로 사망 고려대생 유병진, 87년 대선 당시 공정선거 감시단 활동 중 화재로 사망
3. 29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유세에서 김중기 후보 김일성대학 청년학생에게 남북청년학생 체육회담 개최 제안
4. 1 옥포대우조선 노조원 9000여명, 임금인상 촉구대회 갖고 전면 파업.
4. 9 민청련, 서대협 등 재야 16개 단체, 반민정당총선투쟁연합 결성.
4. 10 한신대생 곽현정, 86년 건국대 애학투련 항쟁 으로 구속된 뒤 자결
4. 25 고려피혁 노조위원장 최윤범,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분신, 4월 30일 사망
4. 26 총선거, 여당 참패
5. 2 1981년 강제해산된 청계피복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7년만에 부활.
5. 5 유진곤 선생,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옥중 후유증으로 사망.
5. 6 서울시내 택시 완전월급제 요구 파업.
5. 9 신영일, 전남민청련 창설과 5·3인천투쟁을 주도하는 등 민주화운동하다 사망/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서정의 납치사건 발생.
5. 13 고정희(진정 제31호, 기각), 병원에서 추락하여 사망.
5. 13 서울지역 28개대 3000여명, 연세대에서 서울지역총학생연합(서총련) 발족.
5. 15 서울대생 조성만, 명동성당에서 양심수 즉각석방 등 구호를 외치며 할복 투신자살./ 한겨레신문 창간.
5. 18 단국대생 최덕수, 광주를 잊지말자며 분신, 5월 26일 사망.
5. 21 현대그룹 산하 18개사 노조대표 25명, 현대그룹 노조연합회 결성.
5. 24 순천 현대교통 택시노동자 장용훈,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 항의하여 분신, 5월 30일 사망
5. 26 안치웅(진정 제59호, 진상규명불능). 서울대 무역학과에 재학 중, 대우어패럴 농성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1년을 복역하였다. 1988년 2월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실종 당일 평소와 같이 외출하였으나 행방불명되었다.
5. 29 서울시내 85개 노조조합원 등 300여 명,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

6. 4 숭실대생 박래전, 군사파쇼 타도하자 라고 외치며 분신, 6월 6일 사망
6. 6 문용섭(진정 제26호, 인정), 광무택시 운전기사, 구사대의 폭행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9일 사망.
6. 10 남북청년학생회담 원천봉쇄로 무산 6. 20 성균관대생 우인수, 군입대 후 의문의 사고를 당함, 6월 24일 사망
6. 16 10개 학술단체, 심포지엄 주제발표와 관련 검찰의 서관모 교수 소환에 대해 학문, 사상, 비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는 성명 발표.
6. 23 박인순(진정 제65호, 기각), 한신대 대학원 원우회장으로 활동중 기숙사에서 변사체로 발견.
6. 24 우인수(진정 제38호, 기각), 유격훈련 기간 중, 비무장 구보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스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6. 27 국회 광주특위 와 5공특위 등 7개 특위 구성
6. 29 강원 태백탄광 노동자 성완희, 동료의 복직을 요구하며 분신, 7월 8일 사망
7. 2 협성계공 노동자 문송면, 15세의 어린 나이로 수은중독 되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
7. 15 세창물산 노조 사무장 송철순, 파업 중 추락, 7월 17일 사망
7. 20 민통련 등 재야 11개 단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조통협) 발족.
8. 1 박종근(진정 제37호, 기각). 부대 간부들로부터 한약을 지어 달라는 요구를 받음. 화재가 발생한 창고에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8. 1 전국 도시노점상연합회 회원과 학생 1500여명, 고려대에서 노점상탄압규탄대회 개최.
8. 13 전대협 발족, 8·15남북학생회담 추진 8. 14 정성규, 청주민청 간부로 활동 중 사망
8. 25 MBC노조, 방송사상 첫 파업
9. 2 [자본론]을 출간한 이론과실천사 대표 김태경,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됨.
9. 12 현대엔진 노동자 이상남, 구사대 봉고차에 깔려 중상, 89년 5월 16일 사망
10. 5 광주학살, 부정비리 주범 전두환·이순지 처벌을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결성, 전·이 구속투쟁
10. 10 부산대생 양영진, 군입대한 뒤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투신 자결
10. 26 전국의 철도기관사 전면 파업.
10. 31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결성
11. 6 대원여객 노동자 이문철, 부당 해고에 항의하여 분신 자결
11. 12 국회, 5공 광주청문회 시작
11. 14 금성사 노동자 배중손, 노조 민주화와 임금 인상 투쟁에 앞장서다 의문의 죽음을 당함

* 1989년

1. 2 경찰,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 37명 연행.
1. 5 육군 30사단 공병대대 이동균 대위와 김동대 중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사무실에서 5인이 서명한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군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명예선언' 발표(7일, 5명 모두 구속)

1. 8 현대의 구사대를 자처한 50여명, 현대 중전기 노조대의원 단합대회장과 현대해고자협의회 사무실을 습격(현대그룹노동자피습사건)

1. 11 박충렬 등 시국관련 석방자 12명,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 경감 등 경관 12명을 고문, 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1. 13 경찰, 현대그룹 노동자피습사건과 관련하여 장비, 금품 등을 지원한 현대엔진 한유동 전무 구속.

1. 13 현대그룹 노동자 6000여명, 현대중공업 무기휴업에 항의하여 휴업철회 요구 시위.

1. 15 현대그룹 울산지역 계열노조와 전국노동단체회원, 대학생 등 2만여 명, 울산시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현대노동자테러사건 규탄대회.

1. 18 전남대생 50여명과 조선대생 200여명, 광주미문화원과 광주지검을 각각 기습하고 전두환, 노태우 처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1. 2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

1. 27 경찰, 연세대에서 열린 '고교생자주학교'에 참가한 고교생 14명을 조사.

1. 29 전국 금속노련 산한 서울, 경기, 인천 노조 노동자 5000여명, 서울 대학로에서 노동운동탄압분쇄 결의대회 개최.

2. 4 함석헌 선생, 평생을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

2. 18 철거민 정상율, 돈암동 세입자 대책위 활동하다 가옥주의 칼에 찔려 사망

3. 9 국회본회의, 사회보호법, 집시법, 지자제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폐회.

3. 25 문익환 목사 평양 방문

3. 29 장종훈(진정 제13호, 기각), 야학교사들과 술을 마시다 혼자 밖에 나간 후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된 후 치료를 받던 중 31일 사망하였다.

3. 30 현대중공업 파업, 108일 만에 경찰 8000명 투입으로 강제해산.

4. 3 덕진양행 노조위원장 김윤기, 국민대를 다니다 노동운동에 투신, 공장 이전 항의 파업중 분신 자결 / 정부, 안기부 경찰 검찰 보안사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공안합동수사본부 설치, 재야단체에 대한 일제수색.

4. 7 서울교대생 남태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교대인이여 깨어나라며 분신, 4월 8일 사망

4. 9 노동자 최완용, 인천 홍업사에서 산재를 당하고 치료를 거부당한 뒤 분신 자결

4. 13 공안합수부,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를 김포공항에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4. 20 서울노동조합협의회 소속 49개 노조, 단병호 의장 석방 요구하며 시한부 동맹파업.

4. 28 마창지역 노동자 1만여명, 연 5일째 구속자 석방과 고문경찰관 처벌 요구 시위.

5. 3 이철규(진정 제19호, 진상규명 불능), 조선대 재학중 4월 국가보안법으로 수배를 받다가, 경찰의 불심검문받고 산 속으로 도주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가 5월 10일 인근인 광주 청옥동 소재 제4수원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5. 3 부산 동의대참사사건 발생, 전경 6명 사망.

5. 4 노동자 김종수, 무노동 무임금 철폐, 민주노조 사수 외치며 분신 자결

5. 10 수배중이던 조선대생 이철규, 변사체로 발견됨.

5. 18 광주지역 대학생 시민 15만여명, 이철규변사사건 진상규명 및 노정권 퇴진 요구

시위.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5. 29 대우조선 노동자 박진석, 회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의 분신, 6월 4일 사망 대우조선 노동자 이상모, 박진석 동지 분신 이후 민주노조 사수 를 외치며 분신 자결

6. 27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

6. 30 전대협 대표 임수경, 북한 평양 도착

7. 3 기아산업 노조대의원 이종대, 해고반대 투쟁과정에서 분신, 7월 8일 사망

7. 9 전교조 합법성 쟁취대회

8. 2 남성홍진 노동자 최성조, 파업 중 구사대 폭력으로 실신, 8월 5일 사망

8. 12 서울 카톨릭 26개단체, 보안법 철폐 서명운동 전개.

8. 14 이내창(진정 제20호, 진상규명 불능),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내창은 남녀 2명의 방문을 받고 행방불명된 후 다음날인 8월 15일 거문도의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8. 15 문규현·임수경, 판문점 통해 귀환

9. 4 경동산업 노동자 강현중·김종하, 회사의 부당징계 조치에 항의 분신, 강현중 9월 9일 사망, 김종하 9월 15일 사망.

9. 8 MBC 노조 전면 파업.

10. 16 노점상 이재식, 노태우정권의 무자비한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여 분신, 12월 11일 사망

10. 18 치안본부, 오동렬(29세, 서울대 철학과 졸업) 등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관련자 15명을 구속.

10. 29 이재호(진정 제30호, 진상규명 불능), 인천 협신사 노동자, 노동조합 재건 활동을 하던 중 노상에서 보도블록으로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

11. 30 임태남(진정 제72호, 진상규명 불능), 대광교통 노동자, 광주항쟁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4월 3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으며, 대광교통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개별화물 차고지에서 변사체로 발견.

12. 15 4당총재회담, 5공청산 11개항 합의.

12. 18 전대협 의장 임종석, 경희대에서 경찰에 붙잡힘.

12. 31 전두환 국회증언

* 1990년

1. 22 민자·민주·공화 3당 합당선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출범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대회.

2. 1 노동부, 전노협가입노조 중심 660개 노조 업무 조사. 전노협, 자주적 노조운동의 명백한 침해라는 반박성명 발표.

2. 12 안기부, 노동계급 조직관련하여 민중혁명선동 혐의로 2명 구속 10명 수배했다고 발표.

2. 26 법무부, 3.1절 특사로 재일교포간첩 서승 등 사상범 22명 포함 장기복역 1111명 가석방 발표.

3. 14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소속 7개대생 13명, 한미연합사 앞에서 시위하다 모두 연행

됨.

3. 28 김용갑(진정 제36호, 진상규명불능),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원자주화 투쟁을 하던 중 새벽 2시에 승용차에 치어 사망.

4. 6 상영금지된 [파업전야] 6개 도시에서 상영됨.
4. 13 KBS노조 파업
4. 21 대학생, 재야단체 등 3000여명, 연세대에서 국민연합 결성.
4. 28 현대중공업 파업
4. 30 경찰, 1000여명의 병력을 KBS에 투입, 333명 연행해 철야 조사. MBC 노조, KBS에 공권력 투입과 관련 제작 거부 결의, 서울지하철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와 KBS, 현대중공업에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여 지하철 무료운행 결의. 현대자동차 노동자 2만여명, 현대중공업의 공권력 철수, 연행자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하며 시한부 파업 결의, 마산, 창원지역 25개사와 인천지역 72개사로 확산.
5. 3 통일중공업 노동자 이영일, 경찰과 회사측의 지속적인 탄압에 항의 분신 자결.
5. 11 골리앗 크레인에서 농성중이던 현대중공업노동자 51명, 농성 풀고 내려옴에 따라 현대중공업사태 일단락.
5. 15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상범) 무기한 전면파업 결의.
5. 17 철거민 이원기, 철거투쟁 중 무책임한 철거를 막아달라며 목매 자결
5. 18 대유공전생 신장호, 전대협 출범식 참가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다 사망

5. 24 박성은(진정 제46호, 진상규명불능), 단기사병으로 근무 중 무단 결근으로 헌병대에서 영창살이를 하였다. 그 후 광주 중앙교회 옆 유치원 놀이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6. 1 경찰, 학내분규로 임시휴업을 계속해온 세종대에 병력 투입하여 농성학생 전원 연행.
6. 4 한일고생 정성묵, 교육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
6. 5 경화여고생 김수경,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징계반대 활동을 하다 투신 자결
6. 20 정부, 전교조 교사 1천여명 중징계
7. 7 노태우, 민족대교류 주창한 7·7 선언 발표
7. 14 경북 청도 노동자 최태욱,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여 분신 자결 민자당, 방송관계법 등 날치기 통과

7. 14 김진홍(진정 제78호, 기각), 반정부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보안부대의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김진홍은 국군병원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다. 제대 후, 요양 중에도 경찰에 의해 경호요시찰인으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그러던 중 자신의 집에서 사망하였다.

8. 7 노동운동가 최 동, 미제와 적들의 탄압을 고발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결
8. 30 금강공업 노조부위원장 박성호 · 후생복지부장 원태조,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며 분신, 박성호 9월 11일 사망, 원태조 9월 18일 사망
9. 2 노동자 김병구, 제13대 대선과 총선 부정을 폭로하며 자결
9. 3 한소 수교
9. 4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서울)
9. 8 충주고생 심광보, 전교조여, 참교육의 함성을! 등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결

9. 15 서원대생 김기훈, 총학생회 활동으로 몸을 돌보지 않다 병악화로 사망
10. 5 윤석양 이병, 보안사 파견근무 중 탈영하여 민주인사 1300여명에 대한 사찰 폭로
10. 13 평민, 민주당, 국민연합 등 확대비상시국회의, 보라매공원에서 보안사해체 등 요구하는 집회 개최.
10. 18 범민족 통일음악회 개막
11. 8 한양대생 최응현, 민주화투쟁에 제대로 복무하지 못함을 자책하여 투신 자결
11. 19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결성
12. 3 기독교교회협, 윤석양 이병에 인권상 수여.
12. 9 포철, 현대중공업 등 16개 대기업노조, 대기업노조연대회의 결성.
12. 26 안기부, 자민통 관련 31명 구속 발표.

* 1991년

1. 5 원진레이온 노동자 김봉환, 아황산가스에 중독 되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

2. 3 남현진(진정 제42호, 진상규명불능), 한국외국어대생. 소속 군부대에서 약100m 떨어진 영외 야산에서 목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2. 16 수서비리 사건

2. 20 송종호(진정 제17호, 기각), 동계 혹한기 훈련기간에 지휘차량에서 야간 상황근무를 하던 중, 차량 내 사격지휘도판과 차량 벽면 사이에 목이 끼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3. 9 신용길, 구덕교 교사로 참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사망
3. 12 국가안전기획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으로 수배를 받아온 박노해(본명 박기평)를 검거 구속.
4. 21 인천 서울지역 학생 노동자 1000여명, 대우자동차 노조간부 구속과 휴업사태에 항의 시위.
4. 25 한승헌 변호사 등 법조계, 문인, 학계 인사 1128명, 출판자유보장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4. 26 명지대생 강경대, 백골단에게 쇠파이프로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

4. 27 김영환(진정 제50호, 기각),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중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

4. 29 전남대생 박승희, 강경대 구타치사사건 규탄집회 중 분신(5.19 사망).
5. 1 안동대생 김영균, 노태우정권 타도, 공안통치 분쇄를 외치며 분신(5.2 사망)
5. 3 경원대생 천세용,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 사망.

5. 4 박창수(진정 제21호, 진상규명불능),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서울구치소 수감 중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서 치료 중 6층 옥상에서 추락, 사망했다고 발표됨.

5. 8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 사망.
5. 10 성남피혁 노동자 윤용하, 노태우정권 타도, 노동해방을 외치며 분신(5.12 사망)
5. 14 강경대군 장례일에 맞춰 전국 15개 도시에서 15만명이 추도국민대회 참가.
5. 18 이정순, 연세대 정문앞 철교에서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퇴진 을 외치며 분신 자결 / 전남 보성고 김철수, 분신 / 광주 운전기사 차태권, 분신
5. 19 강기훈 유서사건

5. 22 정상순, 전남대 병원 영안실에서 노태우 물러가라며 분신, 29일 사망
5. 25 성균관대생 김귀정, 경찰의 무차별적인 진압작전에 짓밟혀 살해당함
6. 1 보성고생 김철수, 노태우정권 퇴진 을 외치며 분신 자결
6. 3 정원식 총리 밀가루세례 사건
6. 8 인천 삼미기공 노동자 이진희,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에 항의하여 분신, 6월 15일 사망
6. 10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기자회견을 갖고 정원식 총리서리 폭행사건은 폭력정권의 하수인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주장.
6. 15 인천 공성교통 노동자 석광수, 차량시위 도중 지도부 연행에 항의 분신, 6월 24일 사망
6. 27 노동운동가 유재관,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에서 활동 중 경찰의 침탈소식을 듣고 피하다 사망
8. 18 대구대생 손석용, 입대 후 민족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에 고민하다 분신, 8월 19일 사망
8. 22 합동물산 노동조합 위원장 김처칠, 파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9. 17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 신림2동 파출소장이 학생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절명.
10. 14 전남대생 문승필, 시위도중 구속, 출소 이후 협박을 받다가 행방불명, 11월 2일 의문의 죽음을 당한 채 발견.
11. 7 양용찬, 서귀포 나라사랑청년회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요구하며 분신 자살.
11. 13 민주당, 농협, 농민단체, 대학생 단체 등 쌀 개방 반대성명 채택, 미국대사관 앞에서 항의농성하는 등 쌀 개방반대운동 전개.
11. 26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과 학생 시민 2만여명,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미국쌀 수입 저지와 쌀값 보장 전량 수매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개최.
12. 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결성
12. 6 대봉 노동자 권미경, 미싱공으로 근무하던 중 노동통제 강화에 항의 투신 자결
12. 10 탁은주(직권 제82호, 진상규명불능). 창원대 교육학과에 입학 후 참교육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행방불명되었다.
12. 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12. 27 대법원, 박종철 고문치사 혐의로 구속된 강문창 등 4명의 무죄 석방에 대한 원심을 깨고 유죄 인정.
12. 31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합의

*** 1992년**

1. 3 KNCC 총무 권호경 목사 북한 방문. / 영일군 내 이장 30명, 핵폐기장 반대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에 항의하여 집단 사퇴서 제출.
1. 6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개 농어민단체, 쌀시장 개방 반대 전국시위.
1. 7 안명도 주민 7000여명,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궐기대회.
1. 8 한국여성단체연합,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사과 요구 시위.

1. 21 현대자동차 노동자 서영호, 노동조합 활동 중 경찰 침투대비 저지선 순찰을 하다 사고당해 93년 7월 1일 사망
2. 15 원진레이온 노동자 강희수, 산재 치료를 거부당한 뒤 사망
3. 11 노동운동가 박복실, 전북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사망
3. 22 육군 9사단 소속 이지문 중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전국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부재자투표에서 공개투표 등 대대적인 선거부정 폭로.
4. 9 경찰청 보안국,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 관련자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4. 12 숭실대생 이상렬, 야간강좌 부총학생회장으로 과로로 사망
4. 20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됨.
4. 23 정도준(진정 제51호, 기각), 소속 부대의 세면장 천장의 급수 파이프에 적색 태권도복 끈으로 이 매인 채로 발견되었다.
4. 28 숭실대생 박현민, 총학생회 집행부로 활동하다 등록금 투쟁 중 과로로 사망
4. 29 안기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백태웅을 비롯한 주요 간부 39명 검거.
5. 22 전국 택시노련 대표자 1200여명,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회사택시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노조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5. 23 국보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소속회원 500여명, '국보법 철폐 및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결의대회' 개최.
6. 8 정주영 국민당 대표, '공산당 용인' 발언 및 국보법 폐지 주장.
6. 15 전국노점상연합회, 1500여명, '노점상 생존권 쟁취대회' 개최.
7. 23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복역 양심수 석방을 위해 회원과 양심수 1300여명이 5개 도시에서 일제히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발표.
8. 4 한중 수교
8. 10 서울경찰청, 범민족대회 개최 예정 장소인 중앙대와 숭실대에 대해 압수 수색. 전대협의장 태재준 등 71명 연행.
8. 15 범민족대회(서울대, 4만여명 참가).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결성.
8. 29 박태순(진정 제18호, 진상규명불능). 한신대학교 철학과 2학년 재학 중, 위장취업하여 노동운동을 하였음. 부천 역곡동에 위치한 골판기계 제작업체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회식 후, 금천구 시흥동 박태순의 형 집으로 귀가한다고 했으나, 행방불명되었음.
9. 7 국가안전기획부,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57세) 등 간첩 및 간첩방조혐의로 구속된 4명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등 4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가족들을 불법으로 감금했다'며 안기부장과 수사관들을 서울지검에 고발.
9. 28 국가안전기획부, 전 민중당 중앙정책위원장 장기균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구속.
10. 6 국가안전기획부, '조선로동당 남부지역당사건' 발표. 황인오 등 62명 구속.
10. 15 문승필(진정 제27호, 진상규명 불능), 갑자기 철로로 뛰어들어 기관차와 충돌하여 사망.

11. 3 철거민 김선호, 부산 장리동 철거반대 투쟁 중 용역깡패의 집단폭행으로 사망.
12. 18 대통령 선거, 김영삼 당선

* 1993년

1. 14 권두영(진정 제69호, 진상규명불능),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안기부에 의해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재판을 받던 중 목을 맨 상태로구치소에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 1995년

11. 25 이덕인(진정 제23호, 인정), 노점상, 포장마차 철거에 저항하기 위해 망루에 올라 농성하다가 망루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중 행방불명되어 28일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

* 1996년

5. 6 박동학(진정 제79호, 인정), 대구공업전문대학 학생과 사무실에서 동아리연합회 자치권 인정을 요구하며 학생과장 등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라이터 불이 몸에 붙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망.

* 1997년

9. 15 김준배(진정 제22호, 인정), 5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 9월 13일부터 동료의 아파트에 은신하던 중 25명의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하려 하자 아파트 외벽의 줄을 타고 내려오다 1층 화단에 떨어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